

제416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임시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7월10일(수)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현황보고

- 가. 해양수산부
- 나. 해양경찰청
- 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라. 해양환경공단
- 마. 해양수산물과학기술진흥원
- 바. 한국수산물자원공단
- 사. 한국해양진흥공사
- 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자. 한국어촌어항공단
- 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상정된 안건

- | | |
|-----------------|---|
| 1. 업무현황보고 | 2 |
| 가. 해양수산부 | |
| 나. 해양경찰청 | |
| 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
| 라. 해양환경공단 | |
| 마. 해양수산물과학기술진흥원 | |
| 바. 한국수산물자원공단 | |
| 사. 한국해양진흥공사 | |
| 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
| 자. 한국어촌어항공단 | |
| 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여기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 및 국회 유튜브에서 실시간 중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현황보고

가. 해양수산부

나. 해양경찰청

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라. 해양환경공단

마. 해양수산물과학기술진흥원

바. 한국수산물자원공단

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자. 한국어촌어항공단

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0시34분)

○위원장 **여기구** 의사일정 제1항 해양수산부 등 10개 기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어촌의 현실은 고령화, 어업인구 감소 및 수자원 고갈 등으로 심각한 어촌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으로 인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해운산업 역시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국제적 친환경 규제 및 글로벌 해운동맹 개편 등으로 해운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적선사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대응과 함께 해운산업의 본질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해운인력 양성 문제와 항만경쟁력 확보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해양영토 주권 문제와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 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대비와 확고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제22대 국회 첫 업무보고를 통하여 우리 해양수산 분야가 직면한 현실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담보하는 동시에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구현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대안들이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님,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한 후 부처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해양수산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을 뵙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해양수산부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해양수산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삼면이 바다로 열린 우리나라에서 해양수산은 국가 경제의 기반이자 국민의 소중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핵심 분야로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국회의 관심과 지원으로 해운산업은 한진해운 파산이라는 아픔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수출 경제를 굳건히 뒷받침하는 국가 기반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산업은 낡고 오래된 산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2년 연속 수출액 30억 불을 달성했고 특히 김은 수산물 최초로 단일 품목 수출 1조 원을 돌파하며 전 세계 K-푸드 열풍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해양수산업이 놓인 여건과 상황은 결코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수산업은 자원 고갈, 수산물 물가 상승 등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어촌은 소멸과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라 글로벌 물류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탈탄소 규제와 디지털 혁신 등 패러다임 전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 역시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양수산부는 산적한 현안 과제들을 해결하고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활력 넘치는 어촌,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어촌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현장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어촌·연안 활력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촌의 생활·경제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산업은 규제 혁신과 스마트·디지털 전환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수산물 물가 안정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수출입 경제에 기여하는 해운·항만을 구현하겠습니다. 수출입 물류의 99.7%를 처리하는 해운산업은 톤세제 일몰 연장 등 세제 지원과 함께 국가의 핵심 경제 안보 서비스로 지정하여 안정적인 물류 공급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한국형 스마트항만 개발과 함께 권역별 항만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고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해양 신산업과 관광·교육·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첨단 해양모빌리티 산업, 해양바이오·플랜트 등 블루이코노미 선도 산업을 육성하고 해양수산 R&D 투자와 창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크루즈, 마리나, 해양치유 등 다양한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양교육과 문화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조성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해양 보호구역 확대,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해 깨끗하고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어선, 여객선 등 선박의 안전관리와 함께 연안, 항만의 재난·재해 대응 능력을 높이고 작업장 내 안전과 복지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독도를 포함한 해양영토를 확고히 수호하겠습니다.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릴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를 통해 글로벌 해양 이슈를 주도하는 한편 해양수산 ODA와 항만 인프라 협력 등 국제사회 기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조사 인프라와 관할 해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해서도 더욱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해양수산부 전 직원은 오늘 보고드리는 업무계획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정책의 수립, 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계획과 주요 현안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관 송명달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전재우입니다.

해양정책실장 김성범입니다.

수산정책실장 김현태입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윤현수입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최용석입니다.

해운물류국장 이시원입니다.

해사안전국장 최성용입니다.

항만국장 남재현입니다.

대변인 정도현입니다.

감사관 노진학입니다.

정책기획관 류종영입니다.

해양정책관 김용태입니다.

해양환경정책관 오행록입니다.

수산정책관 홍래형입니다.

어업자원정책관 최현호입니다.

어촌양식정책관 서정호입니다.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장 노재갑입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양영진입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류재형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김재철입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강정구입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양동엽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장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현황보고 순서입니다만 오늘 10개 기관 모두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시간 제약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욱 해양경찰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한 후 소관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2대 국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롭게 보임되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안보 환경이 바다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생존과 번영이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해정학(海政學) 시대가 도래하였고 세계 각 국가들은 해양경찰력 강화를 통해 해양주권 확립과 국익 보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상시적으로 재난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대비, 대응 등 해양위기 관리에 종합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해양경찰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보장이라는 기본적 임무를 완수하는 데 목표를 두고 금년도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바다를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해양영토에 대한 빈틈없는 관할권 행사를 위해 동·서·남해 전략적 경비구역을 신설하고 대형 함정 등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 말 신설되는 동해 북방해역 경비를 위해 내년 초까지 대형 함정 두 척을 신조 배치하여 해양영토 경비를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불법 외국 어선에 대응할 단속 전담 함정을 도입하고 해역별·상황별 특성화 훈련을 통해서 위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에서 발생하는 각종 우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선박 월선을 사전 차단하고 도선민 안전이송훈련을 실시하는 등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하여 접경해역 해양경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공위성을 통해 넓은 바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해양정보융합플랫폼 MDA 체계를 구축하는 등 미래를 대비한 첨단형 경비체계를 갖추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보다 촘촘한 해양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항행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해에는 서해권 광역 VTS를 개설하였고 올해 9월 제주권 광역 VTS를 개국할 예정입니다. 향후 2026년까지 동해권까지 구축을 통해 관제 범위를 영해의 55%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안전을 위해 기동점검단을 운영하고 어업인 등과 함께하는 해상 선박사고 시 SOS 버튼 누르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현장활동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재난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과 장비 보강, 법·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민이 안심하도록 해양치안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정미하거나 생계형 범죄는 계도 중심의 수사를 전개하되 민생침해나 안전 저해사범, 기업형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범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척결하도록 전문인력 보강과 과학 수사기법 고도화, 대내외 정보협력 등을 통해 총력 대응하는 한편 예방을 위한 홍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해양에 특화된 전문 수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수사연수소를 확대하고 독자적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도 조속히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을 위한 치안행정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시아 해양치안기관과 더욱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해양 분야 ODA 사업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등 인태 지역 국가들과 전략적 교류·협력을 위해 글로벌 해양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속에서 직접 듣고 현장에서 해결하는 문제해결형 정책을 추진하여 바다가족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치안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해양혁신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이 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여름은 엘니뇨 현상 등 기후변화로 인한 강한 태풍과 폭염,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여름철 바다 이용객이 많은 해역에 연안재난 예방 활동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사고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 해양 안보환경에 대비하고자 인공위성 기반의 첨단경비체계인 MDA를 구축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해양경찰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상권 차장입니다.

안성식 기획조정관입니다.

여성수 경비국장입니다.

박재화 구조안전국장입니다.

장인식 수사국장입니다.

고민관 정보외사국장입니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입니다.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입니다.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업무보고를 받아야 할 전체 공공기관이 다수인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출석한 기관장만 인사를 하고 업무보고와 소속 간부 소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노동진 회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환경공단 한기준 이사장님 출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오운열 원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이춘우 이사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김양수 사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이희승 원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의 홍종욱 이사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김준석 이사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인사)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시작됩니다.

질의 순서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답변시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실시하기로 양 간사님과 협의하였습니다.

먼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 보은군 대추, 영동군 와인, 옥천군 묘목, 괴산군 절임배추의 고장 지역구인 박덕흠입니다.

우선 장관님,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은 잘하고 계신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엄청나게 시끄러웠잖아요, 이게.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맞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지금은 조용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금까지 수산물 검사 그다음에 해역 검사 등을 통해서 지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자료상 나와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수입식품 일일 방사능 검사를 하루에 144건을 한다는 건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박덕흠 위원 하여간 잘 대응을 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님, 고생 많이 하셨지요,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서 잘 견딜……

○박덕흠 위원 그래도 많은 공격을 받으셨잖아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팬찮습니다.

○박덕흠 위원 팬찮아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박덕흠 위원 지금 상황은 원위치로 돼 있는 거지요? 전하고 별다른 이상은 없지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없습니다.

○박덕흠 위원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관님, 정부가 지난 7월 1일 날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기존 농산물에서 수산물 거래를 추가한다고 이렇게 밝혔는데 언제부터 관련 사업을 준비하신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게 올해 물가안정 차원에서 우리 농수산물 유통 개선방안에 대한 거를 4월 달에 경제부처 장관회의에서 논의를 했고요. 그 이후에 농산물만 하던 거를 이제 농수산물로 확대해서 7월 1일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21대 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할 때에는 수산물을 포함한다는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맞습니다.

○박덕흠 위원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산물이 포함된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게 유통비용 절감이라든가 그다음에 생산된 수산물들이 유통비용 절감이 된 상황에서 소비자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러한 온라인도매시장을 또 정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유통단계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하면서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이렇게 하지마는 수산물은 좀 상황이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판장에 도매시장으로 가는 비율이 전체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산지 위판장으로 가는 게 한 80이고 그다음에 산지 위판장에서 도매시장으로 가는 게 80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지금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한 19%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판장 거래 비율이 도매시장이 17%, 가공시설이 30%, 전통시장에서 하는 게 35% 정도 이렇게 됐는데 전체 수산물 거래 가운데 도매시장으로 가는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상황에서 온라인도매시장이 수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현재 상황에서는 유통 비율은 낮습니다만 저희 정부에서 예측하기로는 유통 비용을 10%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게 확대되면 더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어찌 됐든 수산물은 농산물보다도 신선도 유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맞습니다.

○박덕흠 위원 또 요즘 같은 이런 장마 날씨에는 더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현재는 표준화되고 상품화되어 있는 마른 건어물이라든가 포장되어 있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선어물로 지금 확대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온라인도매시장을 위해서 저는 준비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법제화 과정이 아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부처의 노력으로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시작 전에 법적 근거를 위해서 우리 국회가 제정법을 마련해야 했지만 21대에서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거든요. 폐기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법적 근거도 없이 운영 중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박덕흠 위원 성급하게 수산물까지 확대한 건 아닌지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 같은 우려가 기우이도록 해수부에서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해수부 직원이 지금 보니까…… 그때 21대 때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시작을 하는 것 아니에요? 4월 달부터 시작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박덕흠 위원 그래서 여기에 만전을 기해서 문제가 없도록 장관님이 잘 대처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또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저도 농림부와 함께 같이 노력을 해서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고맙습니다.

○박덕흠 위원 다음에, 김 가격 폭등 잘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박덕흠 위원 이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 김 가격 폭등……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국의 마른김 도매가가 저렇게 폭등했습니다, 장관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소비자물가가 오르기는 올랐지만 그중에서도 김값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우선 수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문화적인 영향도 있고 K-푸드의 영향력들이 확대되면서 수출에 의한 가격 폭등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수출국이 중국이지요? 그리고 일본.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중국 포함해서 지금 미국……

○박덕흠 위원 그런데 그쪽 나라에서는 작황이 부진한 건 아니에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생산국가는 중국과 일본인데 작황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박덕흠 위원 그래서 더 수요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수출량 증가가 김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 현상이 일시적이라고 보지 않나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일시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김 수급……

○박덕흠 위원 지속적으로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지금 연구기관의 추이에 따르면 지속가능하게 올라간다고 돼 있는데 김 수급 안정화 방안을 지금 도출해 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덕흠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덕흠 위원 그런데 일본이나 중국이 작황이 좋아지면 결국은 수출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올해 10월 달에 햇 김 나오는 생산량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가 나올 것이고요, 앞으로 지속가능하게 수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의 목표는 그쪽에 지금 두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면 수출 물량이 중국하고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나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우리나라에서 지금 70%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아니, 중국으로 우리가 수출하는 것과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 수출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 수출량은 정확한 숫자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것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위원님 감사합니다.

○주철현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이……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의사진행발언.

○주철현 위원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수부는 지난 5월 8일부터 본 의원실에서 여러 차례 요구한 자료제출을 거부하더니 이제는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해서 요구한 자료마저 지금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면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해수부는 각 광역자치단체의 요구와 김 수출 수요 증가 등에 따라서 김 원초 생산량 확대 및 물김값을 안정 공급하기 위해서 2700ha 규모의 물김 양식장 신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해수부와 전남도가 협의한 도 전체의 신규 양식장 면적은 1658ha로 해당 신규 사업지가 적지조사 실시 업무를 시행했는지 여부, 수산 관련 분쟁조정 사전해결 유무, 불법 양식장 정비 실적 등 타당하고 적합한 절차를 통해서 검토되고 확정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는 전남도에서 내부 행정절차에 따라 개발 계획 검토 중이라는 사유를 대면서 위원회가 의결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나 명백히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만을 자료제출 요구 거부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김 양식장 신규 개발사업은 국가기밀 사항도 아니고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도 아닙니다. 또한 사업이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아무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감시하고 검토하는 게 국회의원의 업무이기도 하고 역할이기도 합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중앙정부가 지자체 내부 행정절차에 따라서 개발 계획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어떠한 규정도 없습니다. 만약 이 같은 사유로 자료제출 거부를 용인한다면 앞으로 정부기관이 지자체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는 정부로부터 어떤 자료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무력화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관련 자료를 즉시 제출하도록 조치해 주시고 또다시 제출을 거부한다면 국회증언감정법 4조의2에 따라서 관계자 징계, 12조 및 15조에 따른 고발 건을 위원회 의결로 처리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장관님과 각 부처 기관장님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들은 거부하지 마시고, 이게 항상 상임위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제때 잘 제공해서 다시는 자료제출 가지고 이런 의사진행발언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한 가지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어기구** 예.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전남도에서 검토하는 개발 계획이 승인되면 우리 부에서 그것을 충분히 보여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주철현 위원** 장관님,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전남도하고 상관없이 해수부에서 검토해서 내린 사항 그걸 지금 내놓으라고 하는 건데 왜 전남도가 결정한 다음에 내놓는다고 하십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주철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이양수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 보고 얘기하세요.

○**주철현 위원** 이야기했는데 엉뚱한 답을 해서 제가 참을 수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법적 근거 가지고 말씀하세요.

○**위원장 어기구** 자료제출이 위법이 아니라면요 가능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생산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해수부에서 추구하는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바다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하자고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위원장 어기구** 그러니까 관련된 자료는 가능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위원님들께 제때 즉시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원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짧게 해 주십시오.

○**이원택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자료 요청 건이에요. 제가 이제……

○**이양수 위원** 간사님 자료는 좀 드려요.

○**이원택 위원** 좀 주세요.

○**이양수 위원** 간사님 자료도 안 드리면 어떻게 해.

○**이원택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안 하게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부산엑스포 관련해서 해수부 해외출장 관련 자료 요청을 했는데 주지를 않습니다. 주지 않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 독도에서 해양과학조사 할 때 일본이 항의했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측 대응 매뉴얼이, 해수부 대응 매뉴얼이 있는데 그 대응 매뉴얼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하는데……

하나는, 해외출장 관련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게 돼 있고, 국가안보나 또는 보안 유지 사항이 아니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토부는 이렇게 제출했거든요. 지금 해수부에서 정상과의 만남 이런 것이 민감하다 어떻다 하는데 여기 나이지리아 대통령과 만난 결과보고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속하게 오늘 오후 속개시간까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 대응 매뉴얼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어기구** 국토부와 같이 해수부도 줄 겁니다.

장관님,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줄 건 주고 잘한 건 칭찬받고 잘못된 건 지적받고 이래야 또 우리가 발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료는 가능하면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경기 화성갑의 송옥주 위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지 1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지난달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서 4만 7000t의 오염수를 방류했고요 또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6일까지, 지금 오늘까지도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송옥주 위원**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 거라고 좀 안이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최근에 여론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1년 전에 방류와 관련해서 갤럽에서 조사한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오염 우려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하고 부정적이다라는 의견이

75% 정도에 달했고요, 이 부분들이 최근 6월에 환경보건시민센터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는데 여전히 67%에 달하는 국민들이 부정적이고 불안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게다가 오염수 방류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도 정부의 방조나 찬성 의견이 있었다라는 조사가 55%에 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 부분을 방조를 했다는 여론조사가 있는데 혹시 이것은 아시고 이렇게 별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신 거세요? 이 여론조사는 알고 계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여론조사는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었어요.

지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그러니까 장관으로서의 답변에 대한 부분은 과학적인 자료에 대한 것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안전한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 거고요.

○**송옥주 위원** 장관님, 설령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무부처의 장관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지금은 이 모든 부분들이 수면하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언제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안전이라든지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끼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한국까지 도달하는 데 얼마나 걸린다고 지금 해수부에서는 분석하고 계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빠르면 사오 년 그다음에 10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렇지요? 지금 전문가들은 삼사 년 정도에 한국에 도달할 거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정부는 그동안 10년 후쯤에는 도달할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괜찮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방류가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송옥주 위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끝나는 부분들은 핵연료에 대한 잔해를 전부 다 제거해야지만 끝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3g을 제거하는 실험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한 오만몇 톤을 방류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나머지 부분이 880t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삼사십 년 후에는 끝날 거다라고 보도가 되는데 사실은 삼사십 년 후에 끝나는 것도 아무도 장담을 못 하잖아요.

해수부에서 장관님과 관계 전문가분들은 언제쯤에 오염수 방류가 끝난다고 예측을 하고 계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

○**송옥주 위원** 예측을 못 하시지요? 예측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삼사 년이나 10년 후에 우리나라에 도달할지, 아니면 더 빨리 될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예측을 못 하고 있고 주무부처인 해수부조차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이 안 되고 계세요. 어디서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주변 해역, 그다음에 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것들은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옥주 위원** 당연히 철저히 하셔야지요. 당연히 하셔야지 수산업자나 어업인이나 또 그 수산물을 먹는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건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이게 일본으로부터 발미가 된 건데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혈세가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방류비용과 관련해서 지난해에는 5240억이 예산 편성이 돼서 사용을 했어요.

올해에는 보니까 7319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말씀하신 부분……

○송옥주 위원 그러면 이게 삼사 년 후에 도달을 한다 예측을 하면 내년이나 후년이나 그 후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될 예정이에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내년에는 더 많이 편성이 되나요, 아니면 올해랑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이 될 계획인가요? 예산 철이어서 각 부처별로 예산을 가안이라도 잡아서 지금 기재부랑 협의도 하고 그러실 텐데 그러면 이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련된 예산이 내년에는 7319억보다 더 많이 편성이 되나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상황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옥주 위원 상황을 보는 게 더 편성된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습시다.

○송옥주 위원 그러면 이거랑 유사하게 되나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현재 상황……

○송옥주 위원 우리나라에 도달하는 시점이 더 다가올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검역도 하고 여러 가지에 대한 예방조치도 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면 이 예산이 이것보다 더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니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오 년에서 10년 후에 도달할 거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으면 올해가 1년이고 내년은 2년이고 그다음에 3년 차고 그다음에 4년 차인데 이 부분들 예산편성에 대한 고민을 지금 안 하고 계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잘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협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편성돼 있는데 액수가 이것보다 더 많을 것 같아서 지금 발언을 못 하시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송옥주 위원 그렇지 않으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해양 투기 대응 사업과 그다음에 어업인 지원 사업에 대한 것들이 편제돼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사실은 예측에 대한 부분이고 현재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옥주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재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예측과 예방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예산 심의와 지금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할 수 있기는 하지만 해수부에서는 장기적인 걸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좀 고민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 국고, 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혈세에 대한 예산 낭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일 본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생각은 있으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수산물 소비, 안전 그다음에 국민 신뢰 회복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과성이 우리가 증명이 돼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나머지 질문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위원님 시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호 위원 경남 사천·남해·하동 지역구 서천호 위원입니다.

장관님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구는 3개 지역인데, 좀 더 쪼개면 4개 지역인데 전부 바다를 면해 있어서 오늘 질의시간이 충분할지 미리 걱정이 되는데, 우선 장관님 이하 수산정책을 관장하시는 많은 분들, 정말 큰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25일 날 방류를 했는데 장관님, 그때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지 않습니다.

○서천호 위원 어느 부서에 계셨던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연구기관의 기관장이었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환경방재공단에서 아마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앞서서 잘 못 들었습니다. 어떤 청이……

○서천호 위원 환경방재공단, 해양환경……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해양환경공단입니다.

○서천호 위원 그러면 그 당시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업무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얼마나 심각했는지 하는 부분을 아마 간접적으로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전,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업계에 타격을 줄 만큼 크게 이슈화됐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런 풍평, 피해에 대한 걱정들은 있으셨습시다마는 우리 국민들의 신뢰와 그다음에 정부의 노력으로 그러한 것들이 큰 어려움들을 이겨 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천호 위원 PT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에 오염수 방류 전후에 주장했던 일부 괴담 수준도 있고 또 일부 정치권,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했던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실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주장이 아니라 일부 여론화된 또 일부 여론이 당연히 과학적인 자료의 뒷받침이 된 듯한, 그래서 괴담 수준으로 많이 활용이 됐고 악용이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화면 한번 올려 주실래요?

보면 많은 분들이 또 정치권에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정쟁으로 활용했다 하는 부분은 장관님, 인정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일부 그런 것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천호 위원 보시면 오염수 방류의 큰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략적으로 이용했다는 측면, 그다음에 산업계 종사자들에게—수산업계를 얘기합니다—큰 타격이 돼서 재앙 수준까지 이를 것이다, 또 수산물을 먹으면 방사능에 오염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호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우리 수산물에 방사능이 검출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방사능 검사는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금 11년부터 24년까지 약 10만 건 정도의 수산물을 검사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영향은 없습니다.

○서천호 위원 아니, 오염수 방류 이후에 검사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검사 내용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서천호 위원 검사기관도 나뉘져 있고 그 단계도 지금 나뉘져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국내 생산 단계, 유통 중인 수산물 또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 해수부, 지자체, 식약처 구분되어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는데 타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의견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243곳에서 해역검사를 하고 있고 수산물은 생산부터 유통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삼중수소 포함해서도 검사하고 있습니다.

○서천호 위원 적어도 지금까지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부분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는 연관성이 없다는 것으로 확정하면 되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오염수 방류 이후에 수산물 소비 성향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소비 패턴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서천호 위원 그러면 그 당시 전후해서, 방류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 수산업계를 망친다 그랬던 주장은 날조됐거나 과잉반응이었다 그렇게 정리하면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광우병 괴담 또 사드 상황을 다 겪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 없이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지어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아서 대통령 탄핵 사유까지 주장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된 여론 호도다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이게 지나고 보니까 별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다 해서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책이 바를 수도 있고 또 어떤 정책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정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여러 가지 해명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 먹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정부에서 반복이 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관련해서 백서를 작성한 적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금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백서는 현재까지 해양수산부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양수산부 자체에서는 백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서천호 위원 조금 전에도 장관님 답변에 말씀하셨는데 소위 방류비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분만 쓰겠습니다.

이 방류비용이 어떤 비용을 포함하는지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 안 하셨고 이게 자칫 잘못 듣게 되면 큰 오해를 살 수 있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 방류대응비용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지 명확하게 정리돼서 답변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일본에서도 오염수 방류 이후에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생태계라든지 수산물 영향 추적조사를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와 협의를 해서 같이 그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해양헌법이라고 불리는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회의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부장이 최근 3년간 매년 참석해 왔습니다. 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됐습니다.

또 지금 해수의 고온화가 우려돼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해수부에서 해수의 고온화에 대한 대책,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준비 상황들, 이것에 관련되는 자료를 좀 제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오후 회의 전까지 제출하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해수부, 오전 회의 마치고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장관님 반갑습니다.

지난 6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세기의 국면 전환용 꿈수다 이렇게 평가받는 동해유전 탐사시추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수부장관은 대통령이 발표하기 전에 탐사시추계획을 알고 있었나요? 또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는 지금……

○윤준병 위원 아니, 있었냐 없었냐만 말씀하세요. 일단 그 전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역할을 말씀드리는데……

○윤준병 위원 아니, 역할은 제가 물어볼 테니까 현재까지 협의된 내용 있어요, 없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현재는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현재는 있었고, 6월 25일인가에 했던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발표 전에는 없었습니다.

○윤준병 위원 없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윤준병 위원 아마 탐사시추를 하려면 해수부의 공유수면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부에서 시추계획을 발표하면서 주무장관하고 이런 내용 협의를 안 한 것은 정상적이라고 보나요, 아니면 해수부가 패싱당했다고 생각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패싱은 아니고요. 이용계획이 나와서 그다음에 어느 지점에 뭘 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오면 프로토콜에 맞춰서 해수부가 움직이는 겁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시추계획이 나오려면 일종의 절차상으로 보면 지질조사하고 물리탐사하고 탐사시추하고 평가정시추하고 유전개발계획, 생산 이런 절차로 유전이 개발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물리탐사와 관련된 내용들만 나왔어요.

그러면 탐사시추를 하려면 예를 들어 어디에 할 건지, 그 지역을 하는데 실제 여러 가지 여건상 가능하다고 보는지, 문제는 없는지 이런 일련의 내용이 협의가 돼야 될 거고 또 해경의 경우에는 어민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들 이런 것들이 같이 평가도 되고 판단이 돼야 될 텐데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 되고 대통령이 발표했던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세요? 걱정하다고 봅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계획에 대해서는 발표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윤준병 위원 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다음에 해수부에서 어느 지점에서……

○윤준병 위원 통상 그러면 해수부가 일반 업무 협의할 때, 시추와 관련된 사전 협의 안 하고 하면 잘했다고 그러고 그냥 결정해 주나요? 그것 관련된 내용을 결정하기 전에 협의를 하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계획…… 예, 맞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면 시추계획을 대통령이 발표하면 당연히 해수부 입장에서 그것 관련된 내용을 알기도 하고 실무적으로 어떤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고 해수부의 입장도 반영이 된 정부의 정책이 결정이 돼서 발표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없었던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발표하신 직후에 산업부와 그다음에 해양수산부가 해야 될……

○윤준병 위원 윤석열 정부는 저질러 놓고 협의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윤준병 위원 아니, 이번 내용 보면 그렇잖아요. 주요 정책 결정을 하기 전에 부처 간 협의를 해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그것을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인데 이번에 내용 보면…… 아니, 해수부의, 해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 개발행위인데 그 내용을 가지고 확인도 안 하고 발표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채취에 대한 세부계획이 수립이 돼야만 그다음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해양환경평가라든가 그다음에 점사용에 대한 것들을……

○윤준병 위원 시추계획이라고 하면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시추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 관련된 여건이 맞는지, 환경적

으로는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윤석열 정부의 의사결정 구조에 엄청난 독단적인 이런 결정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저는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수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점검하시고 동해 유전 시추에 대해서 해수부가 앞으로는 패싱당하지 않고 적절하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관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내에 이것 결론도 안 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무슨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뭘 얻고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 지적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윤준병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고 다음에 답변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윤준병 위원 앞에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와 관련해서 박덕흠 위원님 질의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고 또 존경하는 서천호 위원님 질문에 정략적으로 이용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문제가 없다.

저는 이것은 대표적으로, 송옥주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해수부장관이 해양 환경 전문가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진짜 해양 환경에 대해서 불감증을 가진 분이다 이런 평가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가 되면, 물론 핵 오염수가 우리나라에 도달하는 데는 3년 내지 4년이 걸리지요. 그 이전 단계에서 대비를 잘할 수 있도록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투기를 아예, 3년 내지 4년 이후에 도래될 위험성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투기조차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국민적인 요구였어요.

그런데 3년 내지 4년이 도래되지 않아서 아직 도달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전혀 안전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 해수부장관, 그게 맞나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현재 해역에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윤준병 위원 현재 해역에 위험성이 없다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핵 오염수가 투기되고 있는 내용이 3년 내지 4년 이후에도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아니,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윤준병 위원 3년, 4년 이후에도 안전하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윤준병 위원 뭘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저희가……

○윤준병 위원 어떤 내용으로……

1분만 더 주세요.

어떤 내용으로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IAEA에……

○윤준병 위원 해수부장관께 내가 물어볼게요.

해수부장관은 IAEA를 맹신하면 안 돼요. 유엔해양법협약이나 다른, 해양 환경과 관련된 전문가면 그 전문가답게 그 전문가에 관련돼 있는 영역에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무시하고 해수부장관이 해양 환경 전문가라면서 IAEA를 맹신하고 IAEA 결정을 존중한다고 예전처럼 앵무새처럼 답변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과학적인 방법이……

○윤준병 위원 과학적인 방법이 IAEA만 있냐고요. 다른 위원회나 협약이나 IMO 런던 의정서나 이쪽에서 위험하다고 요구한 내용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윤준병 위원 진짜예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공식적인 답변은 없습니다.

○윤준병 위원 위증하는 거예요, 지금?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말씀하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준병 위원 제가 자료……

○위원장 어기구 마무리해 주시고요.

○윤준병 위원 잠깐만요. 확인을 해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IMO 2021년 8월 20일 보고서의 4쪽 보면요, 일본 정부의 결정은 우리 이웃 국가들의 안전에……

○위원장 어기구 자, 나머지는 2차 질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심대한 위협이 됩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고 있어요.

○위원장 어기구 윤준병 위원님, 이따 2차 질의 때 더 자세하게 질문을 하시고요.

○윤준병 위원 장관이 좀 알고 답변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공식적인 답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이게 공식적인 자료예요, 해수부에서 제출한.

○위원장 어기구 그러면 윤준병 위원님, 보충질의 3분 쓰시겠습니까? 다음에 하시지요.

○윤준병 위원 5분이지 왜 3분입니까?

○위원장 어기구 2분 지나갔어요, 2분. 2분 지나갔어요.

○윤준병 위원 5분을 내가 해야지요.

○위원장 어기구 다음에 질의하시고요.

장관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안위에서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IAEA가 다루고 있는 과학적인 방법을 일본이 따라와서 국제법적인 의무를 다한다면 가능하다는 게 전 정부와 현재 정부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과학적인 조사를 하고 있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더욱 더 연구자들이 매진하고 있는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오늘 논의가 계속될 것 같은데요. 더 좋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음, 이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위원 반갑습니다.

평택항·당진항을 동북아의 물류 중심 친환경 항으로 만들고 평택에 국립해양대학교를 만들기 위해 출마해 당선된 평택을의 이병진입니다.

장관님, 평택항이 언제 개항이 됐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개항 일자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80년도에 첫 삼을 뜨고 86년도에 개항이 됐어요. 그리고 96년도에는 평택항이 어떻게 포지션이 됐습니까? 3대 국책항으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평택항 가 보셨어요, 평택·당진항? 정식 명칭은, 존경하는 우리 어기구 위원장님도 지역구로 두고 계신데 평택·당진항 가 보셨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가 봤습니다.

○이병진 위원 규모가 어떻던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상당했습니다.

○이병진 위원 평택항만 해도, 평택 쪽만 해도 600만 평입니다.

지금 매립하고 있는 지역이 몇 평인지 아세요, 대략?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정확히는……

○이병진 위원 한 400만 평이 됩니다.

지금 부산항이 몇 평이지요? 인천항이 몇 평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평택항이 인천항을 대체해서 만든 항입니다, 처음에 출발점은.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 보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느끼셨어요? 언제 가 보셨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저희가 자동차운반선 안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중소……

○이병진 위원 언제 가 보셨나, 그 얘기만. 언제 가 보셨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취임 초기에 가 봤습니다.

○이병진 위원 취임 언제 하셨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작년 12월 29일이었고 1월로 기억을 합니다.

○이병진 위원 그러면 또 오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현안을 파악하러 방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진 위원 아니, 현안도 좋고 하여튼 또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가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꼭…… 날짜는 제가 지정하지는 않겠어요. 언제고 말씀 주시면 만사를 제치고 달려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3대 국책항으로 시작된 평택항이 지금은 5위로 나락에 빠졌어요. 평택항의 작년도 TEU가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것도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진 위원 82만TEU예요.

그다음에 재작년이 85만 그다음에 2021년이 93만, 물론 2016년에는—집계가 나오기 시작한—62만TEU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동량이 떨어지는 이유가, 컨테이너 CY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로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아무래도 유통 그다음에 물류 쪽에 관심이 있는 업체들의 아마 시장의 판단이 아닐까, 첫 번째는요. 그다음에……

○**이병진 위원** 좋습니다.

사실 자동차 물동량은 말이지요, 평택이 울산항을 추월했어요. 작년도만 해도 165만 대를 처리했어요, 평택항이. 재작년도에는 140만 대입니다.

부동의 자동차 물동량에 있어서 평택항을 뛰어넘는 항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지금 바로 얘기하는데 그것도 답 안 하실 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이병진 위원** 없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이병진 위원** 평택항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물동량이 줄지 않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이런 자동차를 수출하는 업체라든지 수입하는 업체가 평택항을 이용한 이유가 뭐 같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아마도 자동차 공장하고 거리라든가……

○**이병진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수도권 2600만과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이병진 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자동차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외국 자동차회사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대기업이 평택항 배후 CY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 알고 계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병진 위원** 지금 그게 좀 심각해요. 그래 가지고 우리 향토물류기업 같은 경우에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없어서 화주들이 떠나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에 지금 봉착돼 있어요. 그런데 대기업이라든지 외국 자동차회사들은 그냥 너무도 당당하게 막 이용하고 있단 말이지요.

영세한 향토물류기업들은 말이지요, 해수부의 어떤 입찰 요건 이런 것…… 해수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리고 입찰을 하더라도 대기업과 경쟁에서 밀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당진의 시민들과 평택·당진의 어떤 기업들과 함께 공존·상생하려고 하는 이 향토물류기업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지금 봉착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들이 CY를 제때에 적시에 화주들의 니즈를 맞춰서 수출하고 수입하는 데 해수부가 어떻게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향토물류기업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부가 지원책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인 부분들을 더 청취하고 필요한 것들을 더 지원하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러면 지금 땅이 없는 게 아닌데 해수부가 이렇게 대기업에 모든 땅을 준다든지 해외 자동차회사가 쓸 수 있도록 준다든지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향토물류기업들이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더 해수부가 갖고 있는 유휴지를 활용해서 쓰는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맞을 것 같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배후부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허용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민간기업이라든가 향토물류기업들한테 배분이 가능하지만요,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병진 위원** 간략하게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말씀……

○**이병진 위원** PPT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한번 죽 보시면 2025년도에 한 34만 3000평을 2-1단계 확보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공동물류센터가 1만 8000평 정도가 계획을 해 놓기는 했어요. 그런데 우리 향토물류기업들하고 좀 대화를 해 보니 한 5만 평 정도가 부지가 있어야 그래도 정상적인 물류가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들한테 임차할 용의가 있어요, 더 늘려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금 25년 말에 공급 예정지 민간개발 부지 중에 공공용 부지 용도면적 확정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병진 위원** 그래야 우리도……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면 임대아파트가 몇 % 짓고 있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에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것은 아마 부지의 성격에 따라서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한 15%는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34만 평의 15%는 얼마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금 말씀하시는……

○**이병진 위원** 예를 들어서…… 해수부가 여기 유휴지가 없다면 제가 말을 안 하는데 지금 1만 8000평 정도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 한 3만여 평 정도 더 늘려서 이분들의 애로를 해소할 용의가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해수부장관 입장에서는 그 항만이 갖고 있는 특성 살리면서 물류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를 더 고민해야 됩니다.

○**이병진 위원** 그게 봤을 때는 우리 물류항으로서의 발돋움하는 거는 불문가지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이병진 위원** 그런데 거기다 더불어 이런 향토기업들도 상생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물류에 대한 부분은 아까……

○**이병진 위원** 이분들이 이것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임차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아까 말씀드렸듯이 25년 말에 민간 개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병진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확보해 드릴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것은 따로 또 현장 방문하고 나서 더 자세히 파악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다음 질문에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장관님 수고들 많으십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다고 합니다. 또 그 사유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조라는 사유가 들어가 있다 그래요. 상당히 아침에 기사를 보고도 놀랐는데 우리가 이렇게 국회가 운영이 되어서 정말로 어떡할까…… 정말 걱정이 정말 앞섭니다.

현 대통령이 무슨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습니까? 1649만 명의 국민의 지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취임한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가볍게 움직여도 되는 것인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중에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지난 1년 전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아마 장관께서도 많은 얘기를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소고기 수입 관련해서 ‘뇌송송 구멍택’이라는 피담, 사드 배치 시에 전자파에서 튀겨 죽는다고 가서 춤추고 가발 쓰고 했던 사람들 그런 정치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후쿠시마 피담—피담이라고, 진행 중이니까요—후쿠시마 관련해 가지고 어떤 얘기를 나왔습니까? 방류하면은 3개월 내에 오염수로 우리 바다 전역을 다 핵화시킬 것이다, 거기 살고 있던, 후쿠시마에 살고 있는 우럭이 해엄쳐 와서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을 우리 국민들이 먹을 것이다, 방류 후에 일본산 수산물이 제한 없이 들어올 것이다. 소금 삼중수소에 다 오염돼 가지고, 천일염 사재기 파동도 있었다는 거 기억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이만희 위원 그런 얘기를 마음껏 하고 집회하고 했던 1년 전이 지금 1년 전이었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정부가 하는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가 취했던 스탠스와 달라진 것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사능 관련해서 원자력 관련해서 최고의,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전문기관에서 인증된 방법으로 한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 지난 정부의 입장이었고 지금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맞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지금 그렇지만 오염수 자체를 없애야 되는 건 맞는 얘지요.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방류를 한다면 가장 위험성을 낮게 해야 된다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곳곳에 혹시나 국민들의 안전에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가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 건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지금 어떤 작업들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방사능 관련된 오염된 오염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은 해상 방사능 측정, 지금 매달 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수부 그리고 원안위 합쳐서 한 240여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수부는 몇 군데에서 지금 측정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165군데로 알고 있고요. 165군데입니다.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나가서 한 달 정도 뒤에 도착하는 데에서 8군데에 정점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물이 돌아서 오는 태평양도서국에 10개 정점이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 정점에서 지금까지 아마 수천 회 이상 계속 조사를 하셨을 텐데……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단 한 번이라도 요오드라든지 삼중수소라든지 세슘이라든지 이런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전력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전혀 없습니다.

○이만희 위원 다행이지요, 그것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수산물은 생산단계와 유통단계에서 안전검사를 하지요, 방사능검사를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통단계는 어디가 주무부처가 돼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유통은 지금 식약처……

○이만희 위원 식품안전처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거기서 거의 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만 3400건 이상 검사했지만 기준치 이상은 없었다는 것이 나왔었고 생산단계는 해수부가 주관하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어떻게, 생산단계는 거의 모든 생산단계 다 관여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거의 대부분 다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부터 삼중수소를 포함해서 더 안전한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지금까지 나온 사항은 없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없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럼 일본 수산물, 지금 후쿠시마현뿐만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 2011년 사고가 나고부터는 인근에 있는 8개 현까지 모두 합쳐서 그 인근 해역에 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금지조치를 지금 하고 있다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 스탠스는 방류가 지속되는 한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게 맞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 자세는 확고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지켜 주시고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이만희 위원**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해수욕장까지 우리 국민들이 들어가서, 이런 휴가철이나 여름철에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검사하셔가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검사하셨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해수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약 170개소에 대한 것 그 물들이 해수욕장과 관련된 것들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맞습니다. 그 후쿠시마 피담을 둘러싸고 지난 1년 전 정말 무책임한 사람들의 정말 선동에 의해서 우리 어류와 수산업계에 많은 피해가 야기된 것도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예 산, 너희들 후쿠시마 방류 때문에 돈 많이 쓰고 있지 않느냐, 그게 5000억, 7000억 아니냐 이런 지적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로 들어가는 사업들이 수산물의 가격 안정 아니면 수산업자들 아니면 우리 어민들의 소득 보전을 위한 비축사업, 수매사업, 소비촉진사업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후쿠시마가 아니라도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금 상황에서는 기후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만희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적어도 이 후쿠시마 방류 전에도 수산물에 대한 비축도 했고요. 수매도 했었고 수산물 소비 촉진 운동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야당 위원들이 제기하시는 방사능물질에 대한 그 우려 그것은 정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가 미래라는 건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해수부에서 해 줘야 될 것은 우리 해상영역에 대한 방사능물질에 대한 오염 우려에 대한 점검·검사, 우리 생산 수산물, 유통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도의 강력한 안전대책 마련, 일본 수입 수산물 등에 대해서 정말로 국민에게 한 점의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적극 동의합니다.

○**이만희 위원** 저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가지고 이걸 탄핵 청문회 사유로 삼았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정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정쟁에 몰두해야 됩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이 있으니, 안전하니 좀 국민들이 안심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많은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수산물에 대한 접근을 꺼려하는 다수의 주부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더 잘 챙기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장관님,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가 맞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당연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임미애 위원 그러면 지난 6월 달에 우리 한국 조사선이 독도 주변에 해양조사 활동을 했을 때 일본에서 이것에 대해서 항의를 했어요, 그것도 세 차례나.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때 해수부는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10년 동안 한 87건 정도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짧게 해 주시겠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한 번도 저희가 조사를 멈추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임미애 위원 조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어봤거든요? 해수부에다가 당시 이런 항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대응 매뉴얼은 저희한테 주지 않으셨고요. ‘외교부 소관이다 그래서 우리 부는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아직도 장관님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러니까 조사에 대한 소관 업무는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만……

○임미애 위원 조사는 저희, 우리 업무니까 진행대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일본이 독도에 가서 우리의 영토에 대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조사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했는데 해수부가 ‘그것 우리 소관 업무 아닙니다. 외무부, 외교부 업무입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맞냐는 거지요. 장관님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말의 뉘앙스가 조금은 틀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임미애 위원 짧게 해 주시겠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러니까 외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외교 당국에 항의한 것들을 가지고……

○임미애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정말 그런가 싶어서 봤더니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토해양부의 정종환 장관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일본 정부가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자국령으로 명기한 것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내셨냐 하면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 영토라는 데 여지가 있을 수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은 외교부의 업무를 넘어서는 행동을 하신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저도 인사청문회 때 그렇게 똑같이 말씀을 드렸고 영토 수호 의지를 강력하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자료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역대 정부에서 독도와 관련된 언급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명박 정부에서는 임기 동안 총 28번의 독도 얘기를 하면서 해양영토의 체계적 관리하겠다,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확고히 수호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박근혜정부에서는 26번의 독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언급했다는 게 아닙니다. 해수부에서 업무보고를

하든 그럴 때 번번이 이것이 언급되면서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확실하게 인식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정부 때는 독도의 영토주권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그리고 독도 그리고 동해표기 국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라는 이야기를 해수부 보고자료에 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총 39번의 독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놀라운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해수부의 어느 보고서에도 독도와 관련된 보고가 없습니다. 이것 왜 이런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우리 정부의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 독도를 포함한 영해기점을 포함한 것을 해양영토로 보고 있습니다. 그 해양영토에 대한 수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우리 업무의 목표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것을 이불 쓰고 우리끼리 그 안에서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입장을 분명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일본에서 우리 정부가 행하는 정상적인 활동에 대해서 항의가 들어온다면 그것에 맞대응을 하는 것이 관계부처 장관으로서 당연히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장관님은 실제로 12월 말에 취임하셨고 1월부터 업무를 보셨다고 하면 저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는데 그전의 장관님들은 한 번도 독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보고에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었던, 이것 대일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윤석열 정부가 굴종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그 연장선에 있는 것 아닌가, 이러다가 독도를 포기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명확한 임무 수행능력을 갖고 있고……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대외적으로 공포가 되었을 때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대외적으로 공포하지 않고 이 내부에서 이야기하고 마치 이불 쓰고 만세 부르는 격으로 일을 처리하신다면 누가 그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그것을 수호할 의지가 해수부에 있다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대통령 업무보고가 또 있나요? 언제 있나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필요하다면 업무보고를 받으실 수는 있는데……

○임미애 위원 지금은 계획이 없나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아까 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사실은 단어를 가지고 애국심이라든가 현재 해수부가 갖고 있는 임무 등에 대한 것들을 오해를 가지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미애 위원 장관님, 이것은 단어가 아닙니다. 독도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명백하게 영토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우리 영토에 대한 주권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보고를 하는 것이, ‘단어에 대한 오해다’라고 표현하시면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단어에 대한 오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임미애 위원 장관님이 지금 적절하지 않은 답변을 하신 겁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임미애 위원 대통령 업무보고 언제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것은 아직, 올해 다시 잡힌 건 없습니다.

○임미애 위원 계획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다음번 보고하실 때 독도와 관련된 보고를 정확하게 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8월에 우리 독도와 관련된 지속가능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을 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시사점들을 담아서 국회에 다시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정확하게 대통령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이후에 일본에 이렇게 정말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항의 조치가 있을 때 해수부장관님은 좀 더 단호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 회의를 잠시 중단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어기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 장관님께 말씀드릴게요.

장관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진짜 광우병, 사드 이런 데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후쿠시마 오염수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야 위원님들 그리고 행정부 전부 다 모두 정정보다는 민생 그리고 정당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먼저 피력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어업 소득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촌 인구도 계속 줄고 있고. 1970년에 어민이 110만 명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8만 7000명대로 9만 명대도 무너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귀어·귀촌 그런 것들을 많이 하던데 저는 귀어·귀촌 정책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어촌을 좀 잘살게 해 놓은 다음에 귀어·귀촌을 시켜야지 지금 못살고 있는데 귀어·귀촌시키면 못사는 사람들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더 경쟁이 심해져서 어려워지고 못사는 사람들을 양산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봐요. 먼저 어촌과 어민들을 잘살게 하는 방향을 설정해 놓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귀어·귀촌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업 소득이 지금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이양수 위원 연간 2500만 원. 2019년에 2067만 원, 2270…… 그러니까 2500만 원이 안 돼요. 2500만 원이 채 안 되는, 매년 그렇게 통계로 잡히고 있는데 어업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해수부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취임하자마자 전국 어촌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그다음에 어업인들 그다음에……

○**이양수 위원** 이것은 굉장히 큰 질문이기 때문에 한번에 다 말씀하실 수는 없을 거고, 노력은 하시는데 해수부와 그 유관기관들이 하고 있는 지금 정책들은 과제 중심이에요. 많은 과제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 과제 했습니다, 이 과제 했습니다, 어민들을 위해서 이것 했습니다. 계속 과제 중심의 일을 하다 보니까 과제들은 잘 이루어 냈는데 매년 성과가 뭐였느냐 그러면 이런 일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는데 실제로 어가 소득은 하나도 늘어나지를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해야 돼요. 잡는 어업은 더 이상 어렵고 현재 잡는 어업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기르는 어업으로 전향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과제를 많이 하셔야 어가 소득에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2500만 원도 안 되는 어업 소득 이런 것들 때문에 직불금 계속 확대해야 되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런데 지금 수산직불금 보면, 수산직불제를 통한 수산직불금을 보면 요건이 되게 까다롭고 주는 것도 아주 안 주고 싶어서 주기 싫은 것을 억지로 주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종류도 다양하지 못하고. 지금 농업과 임업에서 하고 있는 직불제 수준만큼 종류도 다양하게 돼야 되고 주는 것을 주려고 노력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예를 들어 어떤 시 지역의 상업지역·공업지역에도 어촌계는 있잖아요. 어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상업지역·공업지역이라고 해서 직불금을 안 줘요.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줄 거면, 어민들한테 줄 직불금이면 어민들한테 주시면 돼요. 그것을 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구분해 갖고 거기에 있는 어민은 안 주는 것은 무슨 차별이에요, 똑같은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민인데? 이것 제가 작년에 얘기했는데 아직도 해결 안 됐어요. 제가 한 번만 더 얘기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 개정해 가지고 빨리 어민들한테 똑같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직불금도 주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다음에 종류도 더 다양하게 만들어야 된다. 특히 농업·임업에 있는 직불금은 어업에서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

추가로 더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만들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저는 항상 도와드리잖아요. 열심히 돕는데 자꾸 더 도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에서 노력을 보이라고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해경청장님, 위성조난신호기 300t 이상 선박에 설치 의무화돼 있잖아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이양수 위원** 이게 지금 오발신율이 95%가 넘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이양수 위원 작년엔 제가 지적 한번 했지요. 그래 갖고 부랴부랴 점검에 나서 갖고 한 4분의 1은 점검하셨더라고요. 4분의 3도 마저 하실 겁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금년 중에 다 합동 단속을 통해서, 전파관리소와 관계기관을 통해서 합동 점검을 통해서 오발신율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금년 말까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러면 국정감사 때까지 절반은 하겠네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현재 24% 됐습니다.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올 국감 전까지 50% 하시고 연말까지 100% 다 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십시오.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이양수 위원 그리고 해경이 너무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요. 위성조난신호기가 오작동해서 연락이 오면 해경은 무조건 다 나가잖아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 파견해서 대응을 한다고, 그러니까 행정력이 계속 낭비가 되는 것 아니에요, 대응을 하다 보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이양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말 나가야 될 때 못 나가고 여기에 지금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해수부에서 이걸 우리 일이다 생각하고 자료부터 철저히 준비를 해 놓으세요.

지금 위성조난신호기를 부착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정보는 해수부에 있어요. 그런데 해경은 공유하지 않고 있어요. 해수부에 있는 것을 좀 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공유를 하세요, 어디어디 부착돼 있는지.

그리고 이것 검사하는 검사 주체가 정보통신부다. 정보통신부의 전파관리소하고 전파진흥원이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 결과에 대한 것을 해경이 전혀 달라고 하지 않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가지고 계시면서, 이 오작동이 없어야 연안 어선들의 안전이 담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경 일이다 생각하시고 해수부하고 정보통신부로부터 업무 협조 받아 가지고 자료 가지고 계세요. 자료 요구하면 맨날 없다고 그러고 우리는 관리하지 않고…… 이걸 말이 안 돼요. 해경이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이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오작동률을 최소화하는 게 해경 업무가 돼야 어민 안전이 보장되는 겁니다.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리고 불법 해루질, 진짜 법까지 바꿔 가면서 해루질 못 하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 PPT 두 번째 것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비어업인들이 해루질을 할 수 있는 어구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불법 어구가, 많이 잡을 수 있는 저런 것들이 엄청나게 유통되고 있는데

해경이 이걸 못 없애요. 해경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사를 해야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작년에 24건 29명을 검거를 했는데 사이버상, 인터넷상 또는 필요할 때는 현장 확인을 통해서 금년에도 계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게 24건 했잖아요, 작년에.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이양수 위원** 인터넷에서 지금 맨날 저거를 하는데, 수천수만 건 그걸 사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24건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엄격하게 처벌해서 저걸 없애야지, 저것 그냥 사람들이 와서 해루질해서 고기 몇 마리 잡아 가는 게 아니에요. 단체로 버스로 와 가지고 우르르 내려가 가지고 어민들이 잡아야 될 고기를 관광버스가, 일인당 아이스박스로 몇 개씩 잡아 가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망에 대해서는 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망을 삭제하는 그런 방향도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할 겁니다, 근본적으로 판매하지 못하게끔.

○**이양수 위원** 예, 공개된 데 없애고 잡으면 일벌백계해 가지고 철저히 해 가지고 못하게 하셔야지 어민들의 숨통이 트입니다.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척결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불법 해루질 꼭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식사들 하셨습니까?

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 임호선입니다.

장관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데 이게 광우병이나 사드 괴담으로 치부돼서는 안 됩니다.

6월 28일 날 7차 방류된 것은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임호선 위원** 그러니까 앞서서 잘 대응하시고 계신다라고 하신 부분들은 국민들의 그런 걱정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오히려 대응을 더 강화해야 되는 게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을 뿐더러, 퀴리 부인이 왜 돌아가셨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라듐 발견해 가지고, 그때는 라듐의 위험성을 아무도 몰랐었거든요. 막 화장품으로도 쓰고 약으로도 먹고 사람들이 이래 가지고 그것 나중에 부작용이 알려지면서 그 심각성이 부각된 건데, 후쿠시마 오염수가 잘 아시다시피 폐로가 언제 될지도 지금 불확실한 상황에서 방류 문제는 장관님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된다 하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것이 광우병이나 무슨 사드 괴담으로 이렇게 치부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장관님, 화성 공장 화재 얼마 전에 안타까운 것 보신 적 있지요? 최근에 선박을 통해서 전기차 운송 또 리튬배터리 물동량이 엄청 늘고 있더라고요. 확인을 해 보니까 19년도에 전기차 같은 경우 4.4만t에서 작년도에 25만 3000t, 전기차 물동량이에요. 그리고 리튬배터리 같은 경우도 19년도에 31만t에서 23년도에 78만 9000t의 물동량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선박 내에서 이렇게 전기차라든지 리튬배터리 같은 부분들 화재가 일어난다면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심각한 위험성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박 내 이런 화재 대비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금 기술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11개 넘는 기관 합동훈련들을 현장에 맞춰서, 현장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있고 6월에 대책을 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제가 실재를 좀 파악해 보니까 화물선 제외하고요 연안여객선 120척 중에서 질식소화포를 보유한 것은 22척뿐이고 또 물분사장치를 보유한 차도선은 3%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제대로 화재대응장비 보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 실태 점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실태 점검하겠고요. 배포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계속 신경 쓰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좀 심각하고요.

작년 6월에 전기차 화재 대응 매뉴얼 공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현장에서는 화재장비가 미흡하다…… 소방청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장비들이 있어요, 제가 행안위에서 실태 점검을 해 보니까. 그런데 이런 장비들의 다수가 해수부하고 협조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리고 장비 보급을 위해서 무엇보다 예산 확보가 중요한데 예산 확인해 보니까 내년 예산 고작 10억이 담긴 것으로, 그것도 한도 외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 부분도 필요하다면 국회 증액을 통해서라도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리고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김준석** 예.

○**임호선 위원** 마찬가지로입니다. 해수부에서 가이드라인 유관기관에 배포해서 안전공단에서도 선원 교육시키고 계시지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김준석** 예,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런데 여기 저희가 화재안전공단에서 작성한 안내자료를 한번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예방요령에 전기자동차라든지 리튬배터리 화재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안의 중요성이나 시급성을 감안해서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김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임호선 위원 해경청장님도 같이 들어 주십시오.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임호선 위원 장기계류선박 단속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해수부하고 해양경찰청하고 보니까 약간 업무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해경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계류선박이 아시다시피 방치선박하고 지방법원에서 관리하는 감수보존선박 또 해수부에서 하는 계선신고선박이 있는데 법에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서 선박에 출입해서 관계 서류나 연료유 이런 것들을 확인·점검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실제 사실은 확인·점검하는 사례가 잘 없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해경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경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선주 허가를 받아 가면서 어렵게 어렵게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방에서도 필요한 법적 근거 뒷받침해 드릴 생각으로 지금 내부 검토는 하고 있는데 실태 파악부터, 현장 실태 그리고 해경하고 해수부하고 정기적으로 자료 공유도 해 가면서……

지금 장관님 내용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해양수산부에서는 별도 통계 관리가 안 되고 있고요. 각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통계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해경하고 공유가 되면서 필요하다면 공동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올해 해경에서 추진한 실적 보니까 8주간에 걸쳐서 391척의 선박을 조사해 가지고 17척에 위험 판정을 내렸고요. 20척 선박에서 136kl의 잔존유를 이전하는 성과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해수부에서 같이 공동대응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임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장관님께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올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주철현 위원 그래서 지역의 수산인들, 어민들 간담회를 해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제일 많이 걱정들을 하십니다. 아시겠지만 바다, 어선 이런 것들과 관련된 사업장은 워낙 자연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고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 가지 사고를 피하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육상에 있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제정된 이 법을 수산업 분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런데 법은 지금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맞춰서 저희가 교육 및 컨설팅 작업 계속하고 있고요. 예방 작업 할 수 있도록 하겠고, 하여튼 개선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법안이 잘 구성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런데 몇 가지 먼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3년간 국내 어선사고가 5600건 발생했더라고요. 선박은 6200척, 사망·실종자는 271명인데 연평균 따지면 해마다 1860여 건의 사고, 사고선박은 2060척인데 사망·실종자는 90명 수준이더라고요. 이것이 전체 산업재해율에 비해서 한 10배가량 높은데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알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사망자 숫자는 14배가량 높더라고요. 이런 특수한 현상이라든지 현실에도 불구하고 중처법을 선박에 바로 적용해 버리게 되면 어민들이 어떻게 이것 견디겠습니까? 해수부가 너무 좀 나이브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장관님, 말씀드린 대로 해수부가 지금 취한 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올해도 사실은 3~4월에 안타까운 목숨들이 여덟 분이나 가셨는데 그 이후에 어선사고 안전대책에 대한 대책을 해수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담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2t 이하의 어선에 구명조끼도 의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어선의 선형이라든가 설계에 대한 표준화라든가 그다음에 경보라든가 아니면 주의보 기준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서 가는 것들을 대책으로 마련한 바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장관님, 나름대로 하신다고는 하는데 어민들의 불만은 정말 큼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라는 제한된 공간,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 날씨, 인력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자연환경, 바다라는 특수한 작업환경인데 이와 관련해서 별도의 기준, 별도의 법이 제정돼야 되고 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단순히 현재처럼…… 저희들이 받아 보니까 해수부에서 하는 것이 매뉴얼 제작·배포, 현장교육 이것이 전부더라고요. 이것 갖고 되겠습니까? 매뉴얼 제작·배포하고 현장교육 한다고 해서 10배, 15배 사망사고가 갑자기 다른 육상사고하고 같아질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이게 다 도로 아미타불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매뉴얼도 보게 되면 150에서 200쪽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인력노동에 종사하는 수산인들, 어민들이 어떻게 읽고 이해를 하겠어요? 제가 보기에 참 이게 화중지병(畫中之餅)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중처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5인 이상 어선이 몇 척이나 되는지는 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금 한 4500척 정도……

○주철현 위원 예, 4558척으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선주만 해도 4558명인데 지금 보면 현행법은 의무사항이 모호하고 복잡해서 고령이라든지 학력이 낮은 어업인들이 전문가 도움 없이는 이해가 불가능해요, 또 이행도 불가능하고.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과도한 처벌 규정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어선, 어업 하는 분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국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해수부에서 21년 1월에 법이 제정됐으니까 한 3년 정도 유예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예산을 투입하고 대책을 세우고 탈출구를

열어 줘야 되는데 그냥 가만 계셨어요. 계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교육하고 매뉴얼만 제작·배포하고 이려고 계셔서 어민들이 분통이 터진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장관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별도의 법 규정이 필요하고 또 해수부 차원의 조직적인,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하여튼 간에 어장 어업 여건, 어업활동 여건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동의합니다.

○**주철현 위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육상사고 사례 분석하고 다양한 예방책 수립하고 있는 것처럼 수산 분야에도 유사기관 신설해서 수산업 특수성을 반영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저감대책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 의지가 있습니까? 의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원 팀으로 같은 의지를 가지고 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철현 위원** 우리도 외국처럼 선박에서 기계장비를 사용한 조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 방지장치 또 해상추락 방지벨트 등과 같이 우리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설비·장치들이 연구되고 개발되고 보급되고 또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수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그렇게 추진할 의향이 있는 것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지금 R&D도 하고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관련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좀 같이 해서 저희 의원실하고 함께 빨리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어민들이 정말 불안해서 ‘어업을 안 했으면 안 했지 못 해 먹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여러 가지 어업 여건이 악화되고 그래서 더 안 좋은데 중처법까지 적용돼서 정말 할 맛이 안 난다 이런 분들이 많고요.

지역에서, 여수 같은 데는 수산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시는 분들의 요즘 제일 희망사항이 청탁 들어오는 게요, ‘감척 대상 좀 되게 해 줘라’, ‘빨리 감척하고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게 가장 큰 민원이에요. 그래서 저도 참 곤혹스러운데 해수부에서도 좀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실 의향이 있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1분만 더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 정부 선투자금 일시상환을 지금 기재부 측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2012 세계박람회는 정부와 해수부, 특히 해수부가 중심이 된 정부와 전남도와 여수시가 함께 총력을 기울여서 세계인의 행사가 됐고 사후 활용도 지금 십여 년에 걸쳐서 논란이 있었지만 정부가 책임지고 공공개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이 잡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이 돼서 작년 5월에 항만공사가 재단으로부터 권리의무 승계받고 유지·관리 책임지고 있고 현재는 마스터플랜 용역을 지금 올해·내년 2년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선투자금 중에 1000억은 갚았는데 남은 3658억을 여러 가지 국가 수입이 준다고 일시에 상환하라고 요구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기재부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해수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 같아서 장관님 입장이 어떠신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여수광양항만공사가 25년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기재부에다가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경영하고 같이 관련되다 보니까 1년·3년·5년·10년으로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노력을 해 가지고 여수항만공사 그다음에 우리 기록에 남아 있는 역사적인 장소인 여수엑스포장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전종덕 위원입니다.

해수부장관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현재까지 검출 안 됐다고 해서 앞으로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장은 못 하지요?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지금 ALPS 통해서 간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종덕 위원** 현재까지 안 나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보장은 못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간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전종덕 위원** 현재까지 일곱 차례 핵 오염수 해양 투기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환경운동연합이,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일본 내의 농축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수산물의 경우 4.4%에서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중 1건을 제외하고 한국 정부가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후쿠시마현을 포함해서 8개 현의 지역 수산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입 금지 조치를 하고 있고 그것을 계속 유지·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런데 심각하게 살펴봐야 할 결과가 있는데요. 일본 전역의 해수어 관련한 방사능 검출 결과입니다. 2022년 해수어 검사 결과는 대다수 해수어에서 1Bq 이하로 검출되었어요. 그런데 23년 해수어 검사 결과는 후쿠시마현산 농어에서 33Bq, 송뱅이에서 30Bq 이상 세슘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장어·갈가자미·보리멸치·문어·가자미 등에서 세슘이 검출되었고 전반적으로 핵 오염수 방류 이후에라고 추정되는 세슘의 최댓값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일곱 차례 오염수가 방류가 되었고 해수어의 방사능 오염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일본 연안의 방사능 변화에 대해서 일본 정부로부터 투명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 변화를 면밀히 관찰함과 동시에 우리 연안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더욱더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전종덕 위원 더 나아가서 국내 연안 해수어와 수산물에서 우려할 만한 방사능이 검출되었을 때 국제기준에 근거하면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확신하시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요. 그렇지만 그 누구도, 저는 신도 지금 문제가 없으니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제기준으로 돌리니까 참 유감스럽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우려할 만한 방사능이 검출되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해수부 차원의 구축된 체계가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체계……

○전종덕 위원 만약에 이것이 검출되었을 경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우선은 인과관계에 대한 것들을 풀어 나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전종덕 위원 있으시면 짧게 말씀해 주시고 그 관련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해수부에서는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을 위해서 어선 감척 확대와 TAC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자료에 의하면 올해 50%까지 확대하고 28년도에 100% TAC 시행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장관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TAC 관련해서는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TAC는 서양의 단일 어종이나 단일 업종 어업에는 적합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다에서 나는 것들을 거의 버리지 않고 다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현실에는 맞지 않고 이것을 계속 확대했을 경우에 어업 경영만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또 우리 어민들의 경우는 어종에 대한 TAC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업종을 잡을 목적으로 조업에 나가기 마련이고 또 할당량을 초과한 어획물을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TAC를 수용했던 대형선망어업의 경우도 실제로 그 어업의 배 척이 줄어들고 있고 남은 업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전체 연안의 업종으로 전면 확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우리 어업의 경우 어종은 대부분 기후 변화에 따라서 개체군 변동이 민감해 적정 어획량을 산정하기 어렵고 회유어종이 국가 전체 어획량의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의 공조 없이, 주변의 중국·러시아·일본 같은 주변국의 공조 없이 홀로 하는 TAC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지적 들어 보셨나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

○전종덕 위원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전종덕 위원 답변드릴 기회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이렇게 연근해 어업자원 수준에 맞는 적절한 어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척과, 지금 94년부터 감척 사업을 추진했고 TAC 도입과 관련해서 효과가 있는지 불분명하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지금 해수부가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28년도 전면 도입과 관

련한 우려와 비판이 상당히 많은 조건에서 이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장관님,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짧게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려와 비판이 있다는 사실도 압니다. 다만 전면 도입하는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는 어업인들과 전문가들의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 낸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형선망에서 같이 올라오는 부수어획된, 혼획된 것들을 재사용할 수 있는 정책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일이고요. 우선은 잡힌 것들은, 주목적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잡힌 것들은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국제 공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한일·한중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풀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은 옳고 그름 이렇게 따지자는 차원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바다와 우리 어업에 맞는 수산자원 관리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혜를 모으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고맙습니다.

○**전종덕 위원** 앞에서도 많이 언급하셨듯이 어민들의 고령화 그리고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우리 어업에 TAC가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TAC의 이런 여러 가지 우려와 지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더 나은 방안으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어업인들을 위해서 더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금주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대통령 공약은 우리 국정과제로 관리를 하고 나름 최우선적으로 예산 반영 등 정책 반영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문금주 위원** 잘하고 계신 걸로 보면 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래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문금주 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봐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으신데 대통령선거 공약집에도 보면 일본이 2023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25만t을 방류하기로 발표했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부의 실효적 대책 수립이 미진하다고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입증을 위한 국제 공조도 강화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국민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을까 이렇게 봐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한번 보시면, 작년 신정훈 의원실에서 이렇게 조사한 결과도 있고 오전에 존경하는 동료 임미애 위원님의 조사 결과도 있는데 정부의 대응에서 잘못하다는 인식이 상당히

높고 61%, 그리고 지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하는 정부의 의견에 대해서 국민들은 59.4%가 공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면, 다음 쪽 자료 좀 봐 보실까요?

국정과제에 수산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인프라 확대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수산식품산업 육성이 14% 삭감이 됐고 또 수산식품산업 맞춤형 기술 개발사업 예산도 전년 대비해서 14%, 30.7% 이렇게 삭감된 결과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 자료 또 봐 보실게요.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생산·유통·소비 등 산업 전반의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연두 업무 보고를 통해서 밝혔는데 일부 수산물 유통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수산장비 구입 지원사업도 전년 대비 43.9% 감됐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 구축 전년 대비 53% 감 또 AI 기반 스마트 어업관리시스템 개발도 R&D 예산인데 64.6% 감, 수산 전문인력 양성도 43% 감, 이렇고도 정상 추진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장관님?

또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 및 피해 어민 지원 강화를 공약을 했는데, 국가 어업주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적을 점검해 보니까 겨우 104척 중국 어선에 AIS를 설치한 것에 그쳤습니다.

이렇고도 과연 공약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상 추진된다고 그렇게 제가 봐야 됩니까, 어쨌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중국 어선의 선박식별장치 설치는……

○문금주 위원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국 어선 설치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금 불법 어업에 대한 대응에 대한 부분들은……

○문금주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점검을 제가 하도록 할 거고요.

앞으로 우리 어촌 고령화율이랄지 농가인구 감소에 비해서 어가인구가 이렇게 대폭 준 부분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문금주 위원 어찌 됐든 장관님, 어민들을 위한 주무부처로서 정말 제대로 된 정책 또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정상화에 총력을 다해서 우리 국정과제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리고 장관님, 오늘 계속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장관님께서 보시기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문제입니까, 오염수 방류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걱정, 야당의 걱정·우려 또 시끄럽게 떠든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소리 내는 게 더 문제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러게 말입니다. 그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일본……

○문금주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가 아니라 일본 오염수 방류가 원래 기본적으로 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제가 이제 구분해서 좀 말씀드리면 일본 현지의 환경하고 우리나라에서 현존하고 있는 환경은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금주 위원 중요한 거는 장관님, 결국에 문제는 일본이 일으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들어가지도 않아야 될 예산들이 책정이 되고 소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출이 되고?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아니, 그 예산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어가가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동일한 방법의 예산들입니다. 수산자원 지키는 것 그다음에 어가소득 늘리는 것 그러한 예산들입니다.

○문금주 위원 그런데…… 아니, 장관님 제 질의시간이니까요.

올해 예산을 보면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약 40% 증액을 또 했어요, 7319억 원. 결국 장관님이나 아까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거 아니어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대폭 증액된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 게 문제라는 거지요, 우리가 잘못된 것도 아닌데.

국내 수산물 소비촉진 예산으로 1338억 원도 편성돼 있고 또 가격 안정을 위한 수매·비축 예산도 3219억 원 그리고 또 작년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아마 공개된 것 같은데요. 2023년에서 28년까지 6년간 해수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예산으로 총 3조 1128억 원이 소요될 거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런 예산을 언제까지 우리가 투입해야 하는지 지금 상황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고 우리가 잘못된 것도 아닌데…… 어찌 됐든 또 여러 가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수산업이 지금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 건 아시지요?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1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러한 위기, 국가적인 환경재난 또 기후위기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 수산업의 고갈, 이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한시적으로 또 땀땀식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는 지속가능하고 항구적인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떨까요. 그런 측면에서 본 의원실에서는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법안도 발의를 할 예정인데 저는 한 1조 정도, 그 이상 규모로 기금을 편성해서 기후위기에 따른 수산업의 문제, 위기도 대응하고 이런 국가적인 환경, 재난 이런 부분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장관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계속 체크하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유의미한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현재까지 문제 발생 건은 없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과 관련해서 청문회를 하겠다고 또 단독으로 처리를 했는데 청원 사유 중 하나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입니다.

장관님, 정말 양심과 소신을 걸고 답해 주십시오.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방조한 사실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지 않습니다.

○김선교 위원 없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김선교 위원 정부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한 사실이 있습니까, 과학?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과학이라는 사실로?

○김선교 위원 옹호한 사실이 있냐고요. 없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아니,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다 못 했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 내용에 있잖아요, 내용에. 어제 보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김선교 위원 그에 옹호한 사실이 있냐고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지 않습니다.

○김선교 위원 정부가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우려하고 경고하는 국민을 괴담유포세력,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공격한 적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잘못된 사실들을 유포한 분들은 사실은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린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지 않습니다.

○김선교 위원 없지요? 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계속 체크를 하고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공개해도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반복되는 것에 대하여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거기에 대한 지금 대안으로 진행되는 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금 저희가 해수부에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이 국민의 건강,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검사의 개수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수산물이 갖고 있는 성분 중에서 삼중수소를 추가하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분석 능력들을 더욱 향상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리고 주요 업무를 보니까 내수면도 해양수산부 소관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한 켄가리도 없어요, 한 페이지도. 한 글자도 없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빨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내수면 산업 관련된 발전전략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제가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하겠는데요. 예산을 지자체에다 위임하는 예산이 있지요? 없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거는 아마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리고 직접 하는 예산이 있을 거고. 한 5년 치 거 보내면 힘드니까 3년 치만 좀 자료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김종욱 해양경찰청장님, 거기에다 내수면 관리도 해양경찰청에서 하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수상레저안전법상 해수면은 해양경찰 관할 서장, 내수면은 지자체장이 하는데……

○**김선교 위원** 그렇지요. 여기는 평택에 있는 청에서 하지요, 한강은?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필요시에 저희들이 지원, 단속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제가 수차례 21대 때도 그렇고 수상레포츠…… 알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수상스키와 그리고 웨이크서핑보트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강에 남양주시하고 양평군하고…… 그 부분 알고 계시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영업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파도라 그러나 물결이 아주 심해 가지고 웨이크서핑보트를 타면 이쪽으로 영향이 와 가지고 지금 영업이 안 돼요. 그래서 몇 번 단속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 할 수 있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지자체와 합동단속이 가능하고 작년에 117건을……

○**김선교 위원** 여기 피해 사례 한번 보시면, 보이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래서 해양경찰청에서 직접 나가서 하시고 그 조치 결과를…… 지금 이제 한창 여름철에 그분들 영업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성수기 도래가 됐기 때문에 지자체와 불시 합동단속을 통해서 문제점이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다 권고하고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한 내주 중으로 조치해 주세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장관님,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어촌에 대한 살리기 운동을 아주 궁극적으로, 뭐 중대재해처벌법에서부터 소득까지 다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어촌 뉴딜300 사업은 어떻게 돼 가는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금 128군데가 완공이 됐고요. 지자체에서 지금 완공 소요들을 저희가 계속 관찰하면서 도울 수 있는 것들은 돕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 사업을 선호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게 아무래도 하드웨어를 건설하는 거다 보니 필요한 것들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게 공모사업입니까, 그냥 임의대로 주는 사업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공모사업입니다.

○**김선교 위원** 공모사업이에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김선교 위원** 그러면 열정이 있는 데가 가져가는 거네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김선교 위원** 그래서 그러면 아주 좀 게으른 데는 못 가져가는 거네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저는 게으르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선교 위원** 아니, 글썽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데, 쉽게 얘기해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표현하자면, 위원님께서 표현하자면 그러신 것 같은데요.

○**김선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사 분석 같은 것 안 합니까, 그런 것 딱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글썽요, 그 사업이 제가 바닷가 주변에 가 보면 열정이 있고 이런 정보 화마을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의욕적이고 또 어촌에도 체험마을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 가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그리고 그거에 따른 벤치마킹도 시키고 또 전문가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현장의 목소리 잘 듣고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김선교 위원님 고맙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셨습니다.

다음은 문대림 위원님 질의시간입니다.

○**문대림 위원** 반갑습니다. 제주시갑 지역구의 문대림이라고 합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께서 동해 시추 관련해서 의사결정구조의 대표적인 안 좋은 사례 다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대통령님께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어요. 승인했다고 밝혔는데 법적 절차에 대통령의 승인 절차가…… 대통령께서 계획을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승인이 법적 절차에 있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관련해서 어쨌든 EEZ 안에서의 허가권이나 협의권자가 모두 해수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과 관련해서 산자부 같이 통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 해수부는 해수부의 입장을 가지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절차와 관련해서도 그 절차를 지켜 주시고 허가와 협의 과정에 우리 바다를 지킨다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고요.

그리고 법적 절차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해양 시추인 경우는 환경성의 문제가 매우 큼니다. 매우 크기 때문에 어민 생계를 위협할 만한 그러한 환경의 파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법적 절차의 문제, 환경성의 문제에 대해서 산자부처럼 그렇게 통

으로 넘기지 마시고 우리 바다를 지킨다는 그러한 관점에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부처 절차에 맞춰서 환경성평가, 해역이용평가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적어도 어민들의 동의 없이 해상 유전 개발은 절대 안 된다 이런 관점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역민의 의견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대선 과정에서 해양수산 관련 제주 공약 기억하시는 것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조업구역 관련된 말씀이신가요?

○**문대림 위원** 해양수산 관련해서 몇 개 공약이 안 나왔거든요. 대표적인 것 하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신항 말씀……

○**문대림 위원**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죄송합니다.

○**문대림 위원** 신항만에 속도감 있는 추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권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전혀 접근이 없습니다. 이게 예타의 문제인지 아니면 지방 어항으로 전환이 돼서의 문제인지…… 대통령의 약속, 공약사항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자체하고 지금 소통을 하고 있고요. 문제점 분석들을 통째로 가지고 신항만이 건설될 수 있는 전체적인 틀들을 설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좀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구체적으로요. 지금 4차 항만기본계획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4차 항만기본계획의 수정안에 담기려면 사실은 국가 관리 무역항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그게 전환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되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설계부터 시작해서 제주의 소요를 담아서 갈 수 있는 길은 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그 수요조사에 반영시키는 과정을 도랑 협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도에서 그것을 요청하면 저희가 관계부처하고 같이 협의를 하게 됩니다.

○**문대림 위원** 해사고 추진은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제주에 해사고 추진을 하다가 멈췄던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해 제1회 선원의 날 기념식을 열었고 지금 70년이 넘는 상황에서 굉장히 선원들의……

○**문대림 위원** 아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필요합니다.

○**문대림 위원** 추진할 계획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게 만약에 도의 소요하고 맞는다면, 특별자치도의 소요와 맞는다면 충분히 추진……

○문대림 위원 도하고 해수부하고 이미 진행했었는데 예산 협의 과정에서 중단된 사안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것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도에서 먼저 추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보고……

○문대림 위원 다시 살펴 주시고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살펴보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 계획 또한 말씀해 주시고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걸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고등어 주산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추자 인근 해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다시 확인하시고요. 추자 인근 해역이 아니거든요, 다시 확인해 주시고. 마라도 남단이거든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문대림 위원 한 400km 이동해서 부산공동어시장에 가서 위판이 됩니다. 그게 제주에서 위판이 된다면 제빙·저빙산업, 유통 그리고 위판, 가공, 유통, 여러 가지 수익 구조들이 창출되겠지요. 관련해서 해수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줄 때가 됐다. 지금 화순항을 중심으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줄 아는데 이게 내용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 한번 살펴 주시고요.

그리고 제주산 멸치 먹어 봤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전에 군대 갈 때 어머니가 싸 줬던 것 기억합니다.

○문대림 위원 제주 바다에 멸치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11.8%가 작년에 많이 잡힌다고…… 기존에도 멸치가 많았는데, 멸치가 많이 잡히고 있는데 이것을 소위 얘기해서 상품화시켜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현망 어업허가를, 물론 척수 관리 차원에서 해수부가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역을 영남과 전남 해역으로 오랫동안 묶어 놓은 이유, 그래서 하늘이 제주도민에게 준 선물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고등어 역시 마찬가지다. 마라도 남단이라는 하늘이 제주도민에게 준 천혜의 선물을, 자원을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위판되지 않습니까, 한 97~98% 이상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권현망 어업허가 관련해서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1분만 하겠습니다.

허가정수에 관한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정된 조업구역이라는 명분하에 오랜 시간 동안, 아까 전종덕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시다마는 주어종이 바뀌고 있거든요. 멸치 생산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품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잡는 배, 가공하는 배 같이 가서 선도가 유지된 상태에서 삶고 건조하고 상품화시켜야 되는데 원천적으로 해수부에서 차단해버리고 있다 이거지요.

아까 보니까 여기 계신 해수부 관계 직원 스물다섯 분 중에 네 분이 제주도 분이더라고요. 같이 좀 고민하고.

이것은 사실 억울한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도개선 사항이라고 여겨진다면 그 지역에 관한 부분을 과감히 풀어 주시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어민들 생각해서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이것 보고드리겠습니다, 실무자들이.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석 위원 장관님, 고향이 제주도예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서삼석 위원 맞구먼, 내가 이것 봐 보니까.

어민들 고향은 어딘지 아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바다입니다.

○서삼석 위원 맞아요.

아까 고향 하면 어머니가 싸 준 도시락에서 맛을 봤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처럼 뭔가 내가 부족해도 안아 주고 포용해 주고 또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주는 곳이고 그렇게 연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 어민들이 내 고향이 바다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건 수치화할 수는 없지요? 과연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어민들이 얼마나 많겠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그렇지 않다는 걸 전제하에 제가 장관님께 던지는 겁니다.

공감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어민들의 마음 헤아리려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삼석 위원 왜 그렇지 않은가를 잠깐 들여다보면, 자료 화면 1번 좀……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 어민들 상대로 4년 동안 조사한 통계예요. 10년 후 한국 어부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그런 수치를 제가 보여 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이유가 있는데 어촌인구 소멸, 오늘도 오전에 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정부 대응, 어획량 감소, 인력 부족, 소득 감소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엮여져 가지고 희망이 안 보이니까 그런 이유가 있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이런 것을 대변해 주고 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부 차원의 최소한, 농해수비서관이 아니라 농업비서관 따로, 해수비서관이 따로 있어서 최고 통치권자에게 바다를 고향으로 삼고 있는 어민들의 입장을 전달해 주고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주는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상대적으로 없다라는 데에서 나는 이런 수치가 나온다고 봐요.

두 번째 봐 보세요. 이것 봐 보세요. 인정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서삼석 위원 이것 관련해서 대통령도 발언하고 장관도 유사한 내용을 발언했는데 안 지켜진 이유가 첫 번째 화면에 나왔던 자료의 숫자라는 말이에요.

장관님, 수산인의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뒤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는 것 같구먼, 안 가르쳐 주는 것 보니까. 언제예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다녀왔는데 날짜를 깜박했습니다.

○서삼석 위원 제 발언 버튼 눌러 주세요. 정지해 주세요. 중지해 주세요.

○이만희 위원 4월 1일이잖아, 4월 1일.

○서삼석 위원 4월 1일이랍니다.

장관과 기관장들, 뒤에 앉아 배석하신 여러분들 여기 와서 답변하는 것이…… 4월 1일 날 말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꼭 모를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체크해 갖고 왔어. 그러니까 선서 안 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답변하고 시간 때우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또 할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화면 줘 보세요.

전과 교란으로 어민은 피해 있다고 하고 정부 측에서는 없다고 그러는데 무엇이 맞나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피해는 없습니다. 보여지는 피해는 없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러면 이렇게 발언한 어민이 거짓말했네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정부에서 얘기하는 피해는 예를 들어서 선박이 위험지역으로 떠밀려 간다든가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서삼석 위원 화면 봐 보세요.

대체항법 적용 등을 통해서 실제 피해는 없다는데 대체항법해 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데, 뭐 해 주지도 않았는데 해 준 것처럼 하고 피해는 없다고 하고. 그리고 접경지역에 사는 어민들한테 능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분단국가에서 예측이 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에서는 아무런 노력도 안 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피해가 있고 없고는 두 번째 문제이고.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아닙니다. 해수부에서는 비상상황 대처 방안에 대한 것들을 전파하고 우리……

○서삼석 위원 그렇게 변명하면 국감까지 넘어가니까……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했습니다.

○서삼석 위원 뭘 했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러니까 비상 대처 방안에 대한 것들을 전파하고 배들이……

○서삼석 위원 전파한 내용이 뭐예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러니까 GPS 혼선, 혼신에 대해서……

○서삼석 위원 그러면 여기 아니라고 발언한 사람이, 해수부가 한 것을 이 사람들이 이해를 했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아까 왼편에 계셨던 어업인 말씀이십니까?

○서삼석 위원 이분이 대표니까, 내가 말하는. 대표적으로 발언을 한 사람이니까, 언론에 나와서.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민들이 내 생활 터전인 바다가 고향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정부를 불신하고. 자기들의 10년 후 미래가 암울하다는 그런 수치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객선 공영제 이게 단골 메뉴예요. 제 지역구하고 연결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문제

도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2025년까지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1년도 안 남았는데 언제 한대요? 하기는 해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확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서삼석 위원 확인?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아닙니다. 이게 지금 집행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공영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삼석 위원 주무장관이 확인한다 하면 누구한테 확인한다는 얘기에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러니까 공영제에 대한 지금 확인입니다.

○서삼석 위원 아, 대통령한테 확인한다고?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서삼석 위원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래야 대통령한테 물어볼 테니까.

제가 어제 또 타 부처에 대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바다를 고향으로 삼고 있는 어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도록, 그 범주에 포함되는 사람도 어민일 수 있도록 우리 관련 부처인 해수부가 포괄적으로 폭넓게, 융통성 있게 어민들 입장에서 정책도 펴 주고 또 대통령한테도 어민들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는 그런 역할도 좀 해 주고 그러라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질문한 거예요. 그 말을 동의 안 하지 않을 건 아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주마가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 간사님들 질의 남았는데요.

정희용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 위원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정희용 위원입니다.

장관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대통령과 해수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방조하거나 옹호한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지 않습니다.

○정희용 위원 허위사실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정희용 위원 명백한 허위사실로, 이런 주장을 한다면 명백한 허위사실로 국가기관의 명예를 실추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정희용 위원 맞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허위사실로 국가기관의 명예를 실추하는 안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삼는 청원을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을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걸 국민들은 불안해하지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지 않습니까? 반대했는데 일본이 강행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최선책을 우리가 찾기 위해 노력을 했던 거고.

그러면 국회에서 국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지만 국민이 막연한 불안감으로 너무 걱정하시면 안 되지 않느냐, 또 그 막연한 불안감을 이용한 괴담, 가짜뉴스로 피해를 보는 우리 어민들 또 우리 상인들, 국민들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래서 과학적 증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정희용 위원 2011년도에 후쿠시마에서 쓰나미가 있었을 때 유출량이 어느 정도지요? 추정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런데 지금 일곱 차례에 걸쳐서 오염수 방류하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규모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백 배 이상 높았던 걸로……

○정희용 위원 최소 백 배?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정희용 위원 추정하기로 더 차이가, 양이 많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수만 배 이야기하는 분도 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면 아까 앞선 질의에서 후쿠시마에서 우리나라까지 돌아오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저는 과거에 들을 때는 10년, 짧으면 오륙 년 들었는데 오늘 삼사 년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2011년이고, 2024년이고 지금 일곱 차례 방류량의 수천 배, 수만 배가 방류됐었는데도 과학적으로 방사능 수치가 기준 이상으로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없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런 겁니다. 이게 십몇 년이 지나도 지금 현재 과학적으로 기준치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가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장관님께 여쭙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찬성한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지 않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정희용 위원 앞서 윤석열 정부가 방조하지도 않았다고 말씀하셨고, 방류된 오염수가 방사성 기준치를 넘는 물질 범벅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지 않습니다.

○정희용 위원 방류 이후에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우리가 수입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지 않습니다.

○정희용 위원 후쿠시마 서식 우럭이 우리 바다까지 헤엄쳐서 올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럴 수 없습니다.

○정희용 위원 IAEA가 일본 편만을 들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지 않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러면 우리 정부는 자체 검증은 전혀 하지 않고 IAEA 결과만 믿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검증하고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맞습니다. 이것 다 거짓말입니다. 다 괴담입니다. 국민들 불안감만 조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런 자리에서 검증을 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우리 어민들의, 또 수산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의 불안감을 덜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앞선 질의에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북한 서해 GPS 교란, 저는 이것 북한의 우리 어민들을 향한, 우리 국민을 향한 테러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북한을 규탄해야 되는 거지, 북한을 규탄하지는 않고 우리 정부의 대처만을 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해 가지고 길을 잃은 우리 어민들이 북한으로 떠밀려 갔으면 그냥 못 돌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국제적 테러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런데 5일 동안 우리 어선 852척의 선박이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답변하실 때 보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선박에 대한, 항로를 잃었거나 귀항을 못 했거나 이런 피해는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맞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께서 어민들의 피해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건 한 번 더 체크는 해 보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항로를 잃은 피해 말고 GPS 교란으로 인한 다른 피해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매뉴얼을 갖고 계시지요, 지금?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래서 부족하면 매뉴얼을 보강하시면 됩니다. 북한의 이런, 이때까지 처음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인도적이지 못한……

○정희용 위원 우리 국민들을 향한 인도주의적이지 못한 테러행위인 겁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래서 예상을 해야 합니다마는 북한의 갈수록 더 가중되는 테러도 우리가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해수부에서 북한의 테러까지 걱정해야 되니까, 지금? 참 너무, 북쪽에 참 나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

GPS가 교란되면 못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금 GPS 교란에 대한 것들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러니까

영향이 없는 지상과항법시스템을 실제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스템이 좀 비싸서 이걸 보급형으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래서 그걸 보급형도 만들어 나가고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정희용 위원 그래서 교육을 좀 우리 어민들한테 잘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리고 앞선 질의에서 독도 문제가 조금 언급이 돼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장관님? 독도 당연히 우리 고유 영토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고유 영토입니다.

○정희용 위원 업무보고에 독도라는 내용이 빠졌다고, 내수면 사업도 빠졌다고 존경하는 김선교 위원님 질타도 받으셨습니까마는 보고서에 없다고 해서 우리 고유 영토를 해수부에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크게 생각합니다.

○정희용 위원 당연한 말씀이겠지요.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 독도 주변 해역에 대한 조사가 축소된 사실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런 사실 없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런 사실 없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정희용 위원 그런데 국무위원이시기도 한데 일본에 대한 대응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굴종외교라는 표현, 이런 표현들은 우리 스스로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장관님께서도 우리 해수부 책임지고 계시면서 국무위원이시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정희용 위원 그런 표현에는 좀 설명을 잘 드려서 오해받지 않으시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알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정희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원택 간사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아까 요청한 자료가 안 와서요.

장관님, 부산엑스포 유치 관련한 출장내역 좀 보내 달라고 그랬는데, 아까 위원장님께 요청했고 위원장님이 보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것 자료 준비 가능하신가요? 위원장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게 아마 그 안의 내용이 외교적으로 민감한 자료가 있어서, 열람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원택 위원** 열람이…… 제가 아까 원희룡 장관이 갔다 온 내역을 보여 드렸잖아요, 문서를. 원희룡 국토부는 MPM 망에 올려 놔어요. 그런데 왜 해수부가 자꾸 그러냐 이 말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국토부장관이 MPM 망에 올려 놓은 자료예요. 자료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국가 안보사항이 아니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원택 위원** 예.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저희가 태평양도서국을 자주 다녔는데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그쪽 사정에 대한 정보들이 있어서 다소 어렵다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원택 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유치 시점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시점은 아니잖아요. 유치 시점에서는 그럴 수가 있지만 지금 시점은 아니잖아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게 유치 시점에서는 상대 국가의 정보가 흘러 들어가서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시점은 아니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것 재차 협의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것 주세요. 만약에 제가 절차 하나를, 자료 요청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 자료를 제출 안 하려면 인사혁신처에 자료 제출 안 한 사유를 보고했어야 돼요. 그것 보고하셨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빨리 신속히 검토해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이원택 위원** 외교적 사안이면 외교부에도 보냈어야 돼요. 그런 절차를 이행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외교부에 아마……

○**이원택 위원** 그 자료 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왜 그런 걸 안 주려고 그래요? 주셔야지.

○**위원장 어기구** 1차 질의 끝나고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그다음에 아까 독도 지역에서, 당연히 우리 지역이니까 탐사하지요. 해양과학조사 해마다 해 왔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 항의를 했잖아요, 하지 말라고. 거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있는가를 요청했는데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비밀입니까? 주셔야지. 아까 영유권을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3급 비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외무성에서 우리나라 외교부로 왔고 외교부에서는……

○**이원택 위원** 그게 국가 안보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 주세요. 증감법에 따라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아니, 비밀 인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열람은 가능하다

고 합니다, 직원들이.

○이원택 위원 대응 매뉴얼인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금.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해양조사 관련 매뉴얼은 열람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원택 위원 조금 이따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어기구 1차 질의 끝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이원택 위원 위원장님 좀 재촉해서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안 할 텐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가능한 자료는 좀 신속히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제가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양수 위원 간사 되면 그런 것 그냥 다른 초선 의원님들한테 맡겨요. 간사 돼서도 ‘자료, 자료’ 맨날 그래요.

○이원택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인데 안 주시니까……

○위원장 어기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이게 저는 더 급하다고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남해, 동해, 서해의 수온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33년 동안 해수면 온도가 0.8℃ 올라갔고요. 동해가 1.5℃ 올라갔고 남해가 0.5℃, 서해가 0.5℃ 올라갔습니다. 수온 변화가 어류 생태계 변화를 일으키겠지요?

넘겨 주시겠습니까.

여기 동해를 보면 동해의, 여기 1번에서 10번까지 제일 많이 잡히는 어종과 어획량입니다. 어획량의 변화가 어떤 어종이 줄어들고 어떤 어종이 늘었는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오징어는 78%가 감소했지요? 그리고 명태나 멸치는 동해에서는 과거에 10위권 안에 있었는데 사라졌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가자미류는 48%가 증가했어요.

넘겨 주시겠습니까.

남해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남해는 멸치가 28% 감소했지요? 고등어 43% 감소했고요. 강달이류, 쥐치류, 정어리, 참조기는 아예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전갱이류는 거꾸로 66%가 증가했습니다.

서해 보여 주시겠습니까.

서해도 예를 든다면 멸치는 거꾸로 242% 증가를 했고요. 강달이류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동죽은 71% 감소했습니다.

넘겨 주시겠습니까.

사실 지금 기후위기로 인해서 고수온 변화가 동해, 서해, 남해의 어장의 어종과 어획량에 변화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종과 어획량에 변화가 있는데요. 이걸 2018년부터 23년을 보면 어업소득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업소득은 줄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해수부가 운영하고 있는 면허제도, 금어 기간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과거 80년대에 제정한 겁니다. 어떤 어종은 금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고 또 금지 채장 같은 경우도 언제부터 하고 어선 크기는 어떻게 하고 어획 방법은 어떻게 하고 마을 어

장은 포획과 채취 방법은 어떻게 하고, 이것이 지금 역동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데 사실 어종별로 어구·어법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금어 기간도 다르고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이원택 위원 이것을 조정해야 할 시기에 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면허제도만 보더라도 한정면허 중에 지금 단종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민들이 다 불법어업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걸리면 벌금 내고 전과자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걸 복합으로 해 달라는 요청도 이 흐름과 연계돼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 서해, 남해에서 우리 연안 어민들, 근해 어민들이 어로어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변화를 반영한 면허제도의 금지 기간, 금어 기간 또 여러 가지 어구·어법의 변화를 신속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적극 동의합니다.

○이원택 위원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해 줘야 어민들 소득과 직결돼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TAC 제도와의 연결돼서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온 변화에 따라서 어로어업과 양식어업의 어떤 변화를 해수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해 줘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갈등이 많이 있어요, 지금.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저희들 같은 사람한테 불만이 많이 도착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좀 바뀌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 동의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동의하고요.

○이원택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법이랑 수산업법을 적극적으로 개정해서 말씀하셨던 어구·어법, 선박 톤수, TAC 그다음에 체장 이런 것들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그걸 좀 속도감 있게 해 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범법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어민들 범법자가 양산되고 있고 소득에 변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이것은 우리 한국 어업의,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의 근본적 변화라고 보고 있고 이것의 혁신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걸 시급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제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장관님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 이렇게 장관님 보시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우리 해역에 들어오는 게 안전한 겁니다.

○이원택 위원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이원택 위원 장관님, 아직…… 장관님 논리대로 하면 우리 해역에 아직 안 들어왔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이원택 위원 안전한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해역에 아직 안 들어왔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시뮬레이션 모델에 따라서……

○이원택 위원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모델에 따르면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이원택 위원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일본 공해상에서 측정하고 있는 방사선 원소는 뭐뭐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거기에는 지금 세슘하고 삼중수소가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 두 종뿐이 안 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이원택 위원 탄소-14, 플루토늄, 코발트 이런 것 안 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산이 가능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안전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확인되지 않았는데? 일부는 확인됐지만 일부는 확인 안 된 것 아닙니까? 과학자가 그렇게 말하면 쓰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요.

두 번째, 지금 우리나라 국내 방사선 장비,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방사선 장비가 세슘하고 요오드, 43개지요, 지자체 합쳐 가지고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이원택 위원 우리 위판장이 몇 개입니까? 230개 아닙니까, 위판장이? 해수부가 16개 장비를 갖고 있고 지자체가 27개 갖고 있습니다. 올해 해수부가 4대를 더 도입하고 지자체가 2대를 더 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230개 위판장을 커버가 가능합니까? 아까 11년부터 건수를 얘기하는데 사실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거지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세슘하고 요오드만 가능하잖아요. 삼중수소는 작년에 겨우 2대 도입한 것 아닙니까? 위판장에서 수산물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는 전수조사는 못 하더라도 표본, 샘플이라도 제대로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안전하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확인되지 않았는데? 코발트, 탄소-14, 플루토늄 이런 것은 아예 장비도 없잖아요. 왜 그렇게 안전하다고 주장을 합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노력과 어떤, 국민이 윤석열 정부를 신뢰해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러는데 국민들은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의지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정부가 소극적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일본 마음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신뢰해서 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ALPS가 지금 방사성핵종을 다 정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본 해역에서 일차적으로

과학자의 태도는, 지금 방사성핵종이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지요. 그러면 일본 해역의 일본 해양생태계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ALPS라는 것이, 삼중수소는 희석시키는 것 아닙니까, 물로. 기술이 아니고 희석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태평양 큰 어항에다가 희석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사선이 일본 해양생태계에 어떻게 축적되어 가고 있는지, 플랑크톤이나 어류에 어떻게 축적되어 가고 있는지……

1분 주세요.

○위원장 어기구 쫓어요. 1분 쫓어요.

○이원택 위원 아, 쫓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장관님, 신중하시라는 거예요, 발언을. 신중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2차 질의 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1차 질의가 다 끝났는데요.

장관님,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저도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차 질의가 끝났는데요.

오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장관님이 현장에도 많이 다니시고 고생이 많으신데…… 한 6개월쯤 됐나요, 장관님 취임하신 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현장에 얼마나 많이 다니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엄청 많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한 100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많이 다니셨지요?

해수부의 정책 비전을 보니까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활력 넘치는 어촌, 지속가능한 수산업’ 등등 해서 아주 멋진 워딩만, 말만 여기 잘 되어 있는데, 장관님이 현장에 다니면서 어촌 어민들 만나 보니까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바다, 되겠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제가 분골쇄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 어업인들 뵈는 때마다 더 힘을 내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용기도 주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라 정말 바다를 삶의 터전 잡아서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 질의를 죽 보면 우리나라 수산업이 만만치가 않지요. 그렇지요? 어획량이 한때는 한 200만t 정도 됐었잖아요. 지금 한 반토막 났지요. 한 100만t 정도 됩니까, 어획량이?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100만t 이하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이하잖아요. 그렇지요? 반토막 났고 또 어가도 인구가 거의 반토막 났고요. 또 어업소득도 마찬가지로, 이양수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어가소득도 만만치가 않고 그야말로 어촌이 고령화가 되고 어촌 소멸 위기에, 농촌과 마찬가지로 소멸 위기가

왔는데, 우리 정부가 지금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지요? 우리 정부가 정말 이 어촌 소멸 위기를 막고 정말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어촌 조성을 위해서 잘하고 있는 사업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지금 홍보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취임하고 나서 현장 계속 다니면서 현장의 어려움, 고충, 현안들을 담아서 어촌·연안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어촌·연안 활성화 대책이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위원장 어기구 그게 보니까 어촌뉴딜300 사업 후속으로 하고 있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신활력사업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어민들의 정주여건 그다음에 소득 향상을 위한 안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이게 보니까 5개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한 300개 정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총 한 3조 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어촌신활력사업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이게 유형1, 유형2, 유형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형1은 지금 미달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고 유형3에 많이 몰려 가지고 경쟁률이 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유형1 사업은 개소당 300억 원, 큰 사업이고 유형3은 개소당 50억 정도, 작은 사업인데 왜 이 유형3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유형1은 사실은 어촌뉴딜 사업을 이어달리기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아직까지 하드웨어가 구축이 되지 않은 마을에다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촌뉴딜 사업이 적용이 된 마을들은 유형2나 유형3에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하여튼 이 문제도, 지금 처음 시작해서 그런지 좀 검토가 필요해 보여요. 문제점이 뭔지 잘 확인해서 좀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다음에 우리나라 수산물 자급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자급률.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수산물 자급률이 60%가량 됩니다.

○위원장 어기구 60% 이것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지요? 떨어지고 있는 거지요, 자급률도 계속?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연어 수입량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우리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인당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게 수협중앙회장님, 뭐예요? 쌀이에요, 고기예요, 수산물이에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수산물.

○위원장 어기구 수산물이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수산물을 정말 좋아하시는데 이 수산물 수급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위원장 어기구 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염수 관련해서 오늘 말씀들이 많으신데 이 오염수, 일본이 바다에다 오염수를 안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런데 왜 버렸을까요, 일본이 바다에다? 왜 이렇게 위원님들끼리 서로 논쟁하게 만들지요? 이게 가장 값싼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바다에다가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구 공동의 재산인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들 간에 지금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한테 좀 강력하게 이것 바다에 버리지 마라 항의한 적 있어요? 아니면 IMO라든지 국제기구에 가서 이것 정말 바다에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고 한 적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금 정부가 일본 편만 드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왜 바다에다 버리냐는 말이에요, 일본이. 안 버렸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리고 우리 연안만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우리 국민들이 있잖아요, 태평양에서 참치 잡아다 엄청 많이 드십니다. 원양어업이 있잖아요.

수협중앙회장님, 우리 참치 얼마나 많이 잡아 옵니까, 태평양에서? 많이 잡아 오지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위원장 어기구 그것 어떡할 겁니까, 태평양? 물고기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또 정부 예산을 여기에 지금 특별히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 예산을 지금 7400억 원 정도 투입을 하고 있는데 방사능 검사에 쓰이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다른 건 차치하더라도 방사능 검사에 쓰이는 비용, 정부 예산 중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자료 좀 찾아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어기구 예, 찾아보세요.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방사능 비용 이런 것들은 일본이 버리지 않았으면,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았으면, 오염 투기를 하지 않았으면 이런 비용은 우리 정부, 우리 국민 혈세로 쓸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을 여기에 안 썼으면 우리가 다른 어떤 R&D 비용이라든지 우리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인데 일본 때문에, 원인 제공자가 일본이에요. 우리가 내고 있는 것 얼마예요, 방사능 검사에 쓰이는 비용?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228억 원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러니까요, 228억이 적은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올해만 쓰는 게 아니라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앞으로 30년, 길게는 100년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검사할 겁니까? 그리고 더 많이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용들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일본이 부담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우리가 외교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장관님께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2차 질의를 할 순서인데 휴식 없이 그냥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고요.

2차 질의 1번은 이양수 위원님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 바뀌었나 봐요.

○송옥주 위원 저 가야 돼서……

○위원장 어기구 송옥주 위원님은 두 번째입니다.

○송옥주 위원 아니,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어쨌든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두 번째니까요.

○이양수 위원 먼저 하실래요? 먼저 하십시오.

○송옥주 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먼저 그러면……

○이양수 위원 예, 그러십시오.

○위원장 어기구 양보해 주시겠습니까?

○송옥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장관님, 오전에 이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해보상으로 주민들에게 7789억 원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고요. 또 보니까 주변 국가에도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얼핏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이렇게 언론보도가 난 것을 보니까 이게 당장은 아니어도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국가적인 어떤 분쟁이 있을 거라는 우려를 하고서는 미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유엔해양법협약 사항에 보면 손해배상 관련 사항은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협약을 위반한 경우, 해양환경 오염 방지 의무라든지 환경보호 협력 의무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 이런 법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게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염 원인에 대해서는 원인자,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는 환경법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한 70% 정도가 이 오염수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장관님과 해양수산부에서 이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대처를 해야 되겠다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또 한 가지는 습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관련된 부분들을 질의하겠습니다.

유네스코에서 한국 갯벌에 대한 가치를 더 먼저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요. 1단계에서는 네 군데가 등재가 됐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송옥주 위원 그리고 우리나라에 경기도와 충청권에 있는 갯벌 한 아홉 군데 정도를 추가로 등재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서 아마 몇몇 자치단체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한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화성 갯벌입니다. 화성 갯벌은 아시겠지만 21년에 해수부에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바도 있어서 상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 이런 부

분들이 추진되면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상당히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지역주민이나 또 일부 어민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이 어업 행위를 좀 저해하거나 소유권이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수부 차원에서 이런 우려를 좀 완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또 유네스코에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을 경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부 차원이나 국민들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을 말씀 주시는데요.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마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북한의 GPS 전파 교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어민들의 피해만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북한이 전파 교란을 했는데요. 해수부에서 40억 원을 들여서 구축한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FIS)도 먹통이 됐다고 해요.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송옥주 위원 이게 잘 조치가 되고 있는지 또 먹통이 됐을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이 아마 대안이 돼서 이 부분들을 구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정말 대안이 될 수 있는 건지, 또 조속하게 상용화가 돼서, 앞으로는 이런 북한의 GPS 전파 교란이 지금보다 저는 더 많이 발생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민이라든지 또 해수부 차원이나 또 해경에서도 아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화성 갯벌뿐만 아니라 한국 갯벌의 유네스코 등재와 북한의 GPS 전파 교란 관련된 대책이나 검토사항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화성 습지에 대한 자연유산, 특히 우리나라에 대한 자연유산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은 지역민들하고 지자체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설득해 나갈 부분들이 있으면 충분히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지금 세계자연유산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갖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요새 얘기하는 밸류업 프로그램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환경이 왜 중요하냐에 대한 부분도 있고 지역민들이 갖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많이 높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다만 어업하고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해수부가 적극 소통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FIS가 먹통이 됐다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잘못 표현됐었을 뿐이고요. 지상파항법시스템을 쓰게 되면 위성 기반의 위치를 측정하고 있는 것들은 북한의 공격에 의해서, 전파혼신에 의해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지상파를 통해서 하는 것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두 개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시설비용이 2000만 원 정도가 돼서 아까 좀 더 낮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게 거기까지입니다.

○송옥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이양수 위원 유럽의 선진국 우리보다 잘사는 5만 달러, 6만 달러, 7만 달러 나라가 보면은 광어나 우럭 이런 것 안 잡잖아요. 청어떼, 대구떼, 연어 이런 것만 하잖아요.

혹시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가공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 저도 한 10년 다니면서 계속 물어봤거든요, 왜 우럭하고 광어 이런 거 안 잡냐고. 그런데 제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 사람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안 잡는대요. 그거 잡아 갖고는 인건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가난할 때 일인당 GDP가 1만 달러 정도 될 때는 고기 잡아서 내 인건비를 충당을 한 거예요. 일인당 국민소득 그걸 한 거예요. 그런데 일인당 GDP 3만 5000달러, 6000달러 되니까 우럭·광어 이런 고기 잡아 가지고, 그거 그물이나 낚시나 이렇게 좀 잡아 가지고…… 그러니까 어가 소득이 2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불금 아까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랬고 기르는 어업으로 빨리 전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르는 어업 위해서 정부가 하는 일이 뭐 있어요? 그냥 용자 내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기르는 어업에, 양식에 ‘내 용자 내줄게’ 이거밖엔 없어요.

정부가 노르웨이처럼 연어면 연어, 뿔 하나 정해 갖고 가두리를 바다에다가, 우리나라 3면에 고기 잡지 말고 거기다 꼭 다 가두리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연어를 양식을 해 가지고 아시아 시장 석권하면 되지 않습니까? 노르웨이에서 연어 비행기로 다 지금, 생연어 하면서 돈 엄청나게 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양식해 가지고 아시아에 공급하면 우리가 아시아 시장 몇조 원에 달하는 그런 시장을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앓아 가지고 쉬운 거, 용자 내주고 대출 내주고 양식사업 많이 해 이런 것보다 정말…… 어민들이 그런 기획력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많이 배우시고 기획력 뛰어나신 분들이 기획을 해 가지고 그런 거를 만들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활로를.

그래서 어촌개발로 저기 가두리 양식장 한 5개 하고 수협별로 가두리 양식장 한 10개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먼바다 나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고기 안 잡고, 고기도 없는데 고생 안 하고 그냥 이거 팔아서 살 수 있는 것 그런 거 해결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직원들과 합심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 양식, 진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한다는데 반드시 해수부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셔야 되고.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이양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노무현 장관이 해수부장관 할 때 감척사업 대대적으로 해 갖고 쌍끌이고 뭐고 확 한번 감척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연안 어민들이 한 20년 먹고 산 거예요.

지금 감척사업 대대적으로 또 한번 할 때가 됐어요. 왜냐? 고기가 확 줄었으니까요. 그

려면 감척사업 지금 매년 하는 거 천몇억, 몇억 해 가지고 배 몇 척 하고 이런 거 신청 하는 거 겨우 해 주고 이런 거 말고요. 한번 대대적인……

이제 어항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어민 수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어항 하는 예산 필요 없으니까 그걸로 지금 어촌뉴딜사업, 어촌신활력사업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거 한번 왕창 5000억씩 4년만 해 갖고 2조 들여 가지고 대대적으로 감척…… 그것도 감척 안 해요, 지금같이 단가 낮아 갖고는. 3년 치 저거 해 주다가, 5년 중에 3년 고르라고 그랬는데 5년 내내 고기 안 낚는데 5년 중에 3년 골라 봐야 그것도 시가의 40%밖에는 안 된다고요. 한 10년 중에서 고르라 이거예요. 아니면 한 5년 치 해 주든지.

그래서 유인 효과를 최대한으로 해서 왕창 감척을 한번 시키면 그러면 감척하신 분들은 시가로 보상되니까 대출금 갚고 나머지 갖고 어떻게 좀 다른 삶을 살고, 치킨집 같은 거 하면서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거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경쟁이 줄어들니까 그거 갖고 또 한 20년 연안어업 하면서 먹고살 거 아닙니까?

큰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해수부에서 기르는 어업, 용자 지원 이런 거 말고 정말 큰 과학 시스템으로 과학적으로 다 검토해 줘 가지고 할 수 있는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 그리고 대대적인 감척으로 인해서 경쟁을 확 줄여 주는 거 이런 것들을 하셔야 해수부가 존립 가치가 있고 어민들이 ‘정말 우리 해수부가 우리를 먹고살게 해 주는구나’ 하지. 지금 어민들은 그리고 고령화된 분들, 65세 이상, 70세 이상 고령화된 분들은 직불금으로 그걸 해결해 드리고. 어민들이나 농민들은 연금 같은 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직불금으로 연금을 대신하고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지금 어민들은 해수부에 대해서 그냥 우리를 잘 관리하면서 우리를 고사시켜 가지고 없애려고 하는 그런 조직으로 보지 어민들을 잘살게 하려는 조직으로 안 봐요.

지금 저 다 쓴 건가요?

○위원장 어기구 아니예요. 1분, 마무리……

○이양수 위원 제가 지금 드린 이 세 부분에 대한 장관님의 각오에 대해서 1분간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1분을 저 주시는 겁니까?

○이양수 위원 예.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고맙습니다.

기르는 어업에 대한 중요성은 다들 아실 겁니다. 특히 지역별로 특성화된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화된 환경 그다음에 어종들을 선정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법안 개정에 대한 부분들, 많이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겠고요.

두 번째, 감척 어선에 대한 게 지금 현재 1600억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만 재정당국하고 더 협조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해수부 내에 조금 불용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이 모아 가지고 연차별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직원들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직불금도 한마디 해 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직불금도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답변입니다.

○이양수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책들이 좀 너무 소극적일까 봐 제가 걱정돼요.

전쟁하듯이 하셔야 됩니다, 전쟁하듯이. 전쟁하듯이, 정쟁하듯이 말고.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장관님, 전쟁하듯이 좀 싸우셔 가지고 정말 활력 넘치는 어촌, 지속가능한 수산업이 될 수 있도록 이양수 위원님 질의 잘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천호 위원님!

○서천호 위원 예.

○위원장 어기구 가능하십니까?

○서천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호 위원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해상 유류저장부선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7월 달에 여수 앞바다에서 있었던 시프린스호 사고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서천호 위원 2007년도 12월에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있었던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 이게 아마…… 이 해양오염 피해는 사실은 헤아릴 수 없는 만큼, 또 사후복구를 했다고 하지만 원상복구가 됐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그 정도로 피해가 막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을 안고 있는 곳이 말씀드린 대로 해상 유류저장부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규모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수협이 과거의 어업인들이나 어선의 편리성 때문에 아마 이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업용 면세유를 해상 공급시설을 통해서 지금 운용하고 있는데 이게 애초에 제도를 했을 때는 해상 오염이라든지 해상 사고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낮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름 유출이라든지 해상 사고에 대한, 해상 오염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해수부 주관으로 상당한 부분 육상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래서 해상오염 피해 자체가 천문학적인 배상 책임도 지금 돼 있고 복구 비용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안인데 사실상 전국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4개소입니다. 4개소가 해상에 그대로 지금 현재 운용이 되고 있는데 혹시 데이터가 맞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2척은 지금 육상 이전 중이고요, 예산 들어서 이전 중이고 4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장관님의 조속히 육상으로 이전한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서천호 위원님 시간 절약해 줘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윤준병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윤준병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주변 강대국 눈치를 살피느라 우리 어민들의 생계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정부의 존재 의미가 없다, 동의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주변국 눈치를 본 적은 없습니다.

○윤준병 위원 아니, 동의하냐고 물었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동의하지 않습니다.

○윤준병 위원 대통령 말인데 동의를 못 해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주변국 눈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윤준병 위원 아니, 이 얘기는 대통령이 한 얘기에요. 아니 못 한다며, 지금 왔다 갔다 뭐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결정은 해양 환경뿐만 아니라 이웃 국가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며 게다가 이 결정은 일본과 가까운 한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과 협의 없이 내려진 일방적인 결정이다’, 지금도 유지하고 있지요?

해수부 입장 유지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금 당사국총회에 제출한 입장은 국제기구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것들을 공식적으로 하기 전에 했던 것들입니다.

○윤준병 위원 아니, 하기 전에 했든 이후에 했든 그 입장이 유지되고 있냐고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 입장은 지금 국제 기준에 맞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윤준병 위원 아니, 그 입장이 현재도 유지되고 있냐고 묻잖아요.

유지되고 있어요, 안 해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면서 무슨 문재인 정부하고 똑같은 입장을 유지한다고 그래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거는 지금……

○윤준병 위원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나온 얘기에요, 해수부의. 그러니까 그것도 거짓이고……

또 ‘IAEA 결정을 존중하면서 다른 국제협약들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다른 데서는 이러한 결정을 공식적으로 한 바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최근에 2023년 8월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해서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예요. 여기 보면 ‘첨단액체처리시스템을 통한 오염수를 방출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여러 차례 청취했고 일부 특별보고관들도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태평양도서국포럼 PIF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대만 농업위원회 장관급 인사도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공동성명서를 통해서 핵 오염수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런데도 다른 나라들은 우려를 표명한 바가 없다고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금 보여 주신 유엔인권이사회,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공식 우려 표명은 이게……

○윤준병 위원 없다면서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아닙니다.

○윤준병 위원 아니, 있잖아요. 왜 없다고 단언하냐고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얘기한 거는……

○윤준병 위원 아니, 당사국 내에 IAEA가 아닌 다른 국제기구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더니 없다면서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유엔, 이것 보여 주시는 자료는 지금 원전 노동자들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유엔인권위원회는 국제기구가 아닙니까? 국제기구 아니에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맞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국제기구 맞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런데 왜 다른 얘기를 해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다만 여기에서 권고하는 것은 원전 노동자들에 대한 것을 얘기한 것이고 오염수에 대한 얘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것 다시 확인하고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윤준병 위원 또 다른 내용들도 다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에서 지금 유엔해양법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런던협약·의정서 이조차도 제대로, 우리 정부가 추구해야 될 의무·역할 이거 제대로 안 하고 방기하고 있고 심지어 IAEA 지침에 나와 있는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소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는 그 취지, 여기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도 준수 안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윤석열 정부가 IAEA를 맹신해서 과학이 모든 걸 해결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사실이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IAEA는 국제적인 공신력을 갖고 있는……

○윤준병 위원 다른 데는 공신력이 없는 국제기구냐고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러니까 원전 관련된……

○윤준병 위원 원전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지요. ‘해양투기, 절대로 하지 마라’ 그게 국제기구의 요청 사항이고 의무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러니까 정부에서……

○윤준병 위원 그것 맞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IAEA가 그걸 관할하지 않습니까.

○윤준병 위원 아니 해양투기를 하는데, 방사능 해양투기하면 IAEA가 그것 결정합니까? 그다음에 해양과 관련된 오염 여부를 IAEA가 결정합니까? 왜 괴변을 주장하세요?

그래서 법사위에서, ‘윤석열 정권은 온 인류에 재앙을 일으키는 일본의 핵폐수 해양투기 범죄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고 국제법으로 보장된 인접국 권리를 포기하였으며 핵폐수의 위험을 우려하고 경고하는 국민을 괴담 유포 세력,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공격했으며 심지어는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며 핵폐수가 안전하다고 홍보까지 했다’, 이 내용은 지극히 사실에 근거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총리나 해수부장관마저 핵처리수의, 핵오염수의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미명하에 본인들이 오염수를 마시겠다고 공언했어요. 마셨어요?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어떻게 안전하다고들 주장하고 그걸 이어 갑니까?

○위원장 어기구 윤준병 위원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딱 한마디만……

○위원장 어기구 예, 장관님 말씀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거나 국제기준 그다음에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은 방류에는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또한 이 기준이 우리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근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준병 위원 한마디 더 첨언하면요. 아니, 그러면 처리수를 방류하지 못하도록 요청을 했어야지요, 적극적으로.

○위원장 어기구 추가질의 때 또 하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그걸 방조해 놓고 뭘 다른 얘기들을 해요?

○위원장 어기구 윤준병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진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장관님, ‘오염수 투기에 대해서 묵시적 동의를 했다, 결기가 없었다. 누가? 윤석열 정부가’, 이런 거예요. 그게 방조했다라고 얘기되고 있는 겁니다.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228억이라고 했는데 일본한테 구상권 청구할 용의 있어요, 원인자 부담 원칙?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과관계가 밝혀져야 하는 건입니다.

○이병진 위원 아니, 벌써 투기한 건 분명하잖아요. 그 주변에는 벌써 오염되고 있다는 게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다가오지는 않았어도 우리가 들어가는 돈은 200억 이상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청구할 준비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평택항, 물류항, 물류협동조합, 정말 어려운 향토기업들이예요. 임차할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래요, 54만 평에……

지금 경기가 좋아요, 나빠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좋지는 않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런데 7000억을 들고 와서 투자하겠다는데 이거 환영해야 됩니까, 그냥 백안시해야 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주택을 짓는 데다가……

○이병진 위원 아니, 환영해야 됩니까? 하여튼 그 내용성을 또 따져 보고……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왜냐하면 제가 환영해야 될 건 해양수산부 관련 업무였으면 환영이 가능한 일입니다.

○**이병진 위원** 주택 이야기는 물론 아주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먼저 2중 배후 단지에 공동주택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이 해수부였다는 것 알고 있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아무래도 지금……

○**이병진 위원** 아니, 해수부가 2016년도에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공동주택을 신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1만 6493세대를 여기에다가 신축하라고 이렇게 제안을 먼저 했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짧은 사실관계만 좀 밝히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아니, 제가 여기 사실관계, 이 팩트에 입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2017년도에 평택시에는 공동주택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도로나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 가지고 3674세대만 짓자고 얘기가 됐고 결국 대화가 오고 가면서 3500세대로 합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의 13쪽 보면 해양관광·교육·문화 저변 확대, 바로 여기가…… 54만 평에 말이지요,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보면. 예? 안 들어가는 게 없다는 말이지요.

자, 보자.

의료시설, 복합스포츠센터, 호텔, 리조트, 공동·단독 주택, 해양박물관—청주에도 해양박물관 짓네요, 평택에 해양박물관 없어요—해양체육공원. 이것 민자 투자해서 하겠다는데 왜 나는 반대하는지, 저 지극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인데 이해가 안 갑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다……

○**이병진 위원** 아니, 제 얘기 끝나고요. 시간이 없어요.

친수공간에 입각한 향만을 또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반대를 했어야지. 또 공동주택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놓고 지금 반대떡 뒤집듯이 말이지요, 조삼모사식으로, 이렇게 반대한다는 여론이 지금 들끓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이지요, 향만법에도 보면 2중 향만시설을 할 때…… 지금 보면 당진 LNG 생산기지의 준설토가 있고 또 향로 유지 준설토가 나오고 있어요. 그걸 여기 매립지에 갖다 놓으면 일거양득이 되잖아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린다, 안 노린다? 또 노릴 수가 있어요. 이것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해결할 의지가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우선은 팩트 좀 말씀드리면……

○**이병진 위원** 간단하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향하고 있는 지점이 어디냐가 중요한데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병진 위원** 여기 공동주택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거 복합레저, 관광레저, 해양수산부가 주창하는 사업계획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부합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맞습니다. 향만물류 노동자를 위한 거주공간이 없어서 2중 시설에 지금 넣는 겁니다.

○**이병진 위원** 아니, 그건 서로 접점을 찾아가자 이거지요. 전체적인 그림 7000억, 1조에서 3000억밖에 안 빠져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또 사업자가 있어요.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입장에서는 향만물류 노동자에 대한 공간은 사실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병진 위원** 향만 노동자들의 주거의 문제도 면밀히 검토를 하자고요, 그건.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래서 민간에서 개발하면 분양이 먼저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병진 위원** 아니, 민간업자는 분양사업 해서 돈 또 벌어야 되잖아요. 기업의 목적이 뭐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익을 창출하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맞습니다. 장관 입장에서는 항만과 물류가 잘돼야 됩니다.

○**이병진 위원** 이익이 있어야 뛰어드는 거지 7000억 그냥 들고 오겠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지요.

1분만 더 주세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지금 어려운 시기에 상생하고 지역경제도 살리고 항만도 살리고……

평택이 600만 평 중에 해안선이 16km인데 친수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다 보안시설이에요, LNG 기지, 2함대 사령부. 여기 가면 터미널 조금, 저기 가면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부두 조금.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개발이 너무 안 돼서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 평택 청장은 왜 안 나왔어요, 오늘? 3대 국책항으로 시작했는데 왜 안 나왔습니까? 알고 있잖아요. 왜 4급이에요, 평택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계획 수립해서 갖고 오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알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평택이 중부권 우수항만이고 최고의 항만인데 행정청도 이 정도 수준에 머물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아까 저희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택항 방문하고 지역민들, 지자체, 같이 얘기를 좀 해 가지고 접점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기대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이만희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회의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해양경찰청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최근에 해양경찰청에 있는 여러 가지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대한 사이버해킹 시도 건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하는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한번 그 PPT 미리 띄워놔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작년에만 해킹 탐지 건수가 582건입니다. 그리고 이걸 4년간 비교해 보면 거의 한 430% 가까이 증가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 PPT에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사이버보안 역량에 대해서 국정원이나—국자원이라고 그러지요—국가정보자산관리원 등에서 매년 검증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사이버해킹 시도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오히려 낮아지거나 정제되는 것을 지금 표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평가 자체가.

혹시 청장님, 해경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사이버전산시스템이 몇 군데 정도 있는 줄 아십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저희들이 본청의 종합전산센터 관리하고 있는 서버, 메인 서버가 한 군데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런 시스템을 비교해 가지고 총 원내 군데 전산시스템이 독자적으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걸 아마 청장님도 전문 분야가 아니면 관심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국가정보자산관리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서른아홉 군데, 또 해경이 자체적으로 외주, 예를 들어서 비밀관리업무 시스템이라든지 북한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이런 시스템들은 외주에서 이렇게 해 주는데 문제는 외주 업체에 주는 것이 한 군데 외주 업체로 특징이 돼 있습니다. 1개 업체가 해경의 모든 전산시스템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은 지난번 선관위 해킹 시도, 북한 해킹 시도와 관련해서 드러난 상황에서처럼 보안업체 해킹 시도, 외주 업체가 관리하는 한 군데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감시라든지, 상호 감시라든지 견제라든지 경쟁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들끼리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높다 하는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리고 전문인력 자체도 1명도 없습니다, 사실은. ISO 27001이라는 인증 자격이 있거든요. 이걸 뭐냐 그러면 사이버해킹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대응 역량을 가진 사람의 자격증인데 해경은 유감스럽게도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나 다른 민간인이 1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를 그냥 외주에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사이버보안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같은 것을 받을 때도 최근에 거의 뭐 97% 이상 다 받기는 하는데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그분들은 ‘왜 그러면 이걸 불이익이 없냐?’ 이러니까 ‘자율적이고 자기 주도적 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이걸 합당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청장님이 가셔서 해경청 전산시스템 해킹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이번에 위원님 지적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문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세세히 살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리고 지난번,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아마 2011년도에 발생했던 진도 VTS, 아시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이만희 위원** 해상교통관제시스템, 그때는 아마 해수부 쪽에서 관장했는지 해경 쪽에서 관장했는지 모르겠는데……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저희들이 관리하다가 업체가 바뀌는 바람에 서버를 가지고 나갔던 상황인 걸로……

○**이만희 위원** 그때 당시에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도 아마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례들을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국정감사 때

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해수부장관님, 지난 6월 달에 있었던 북한의 서해상 GPS 전과 교란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서해 5도 어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뭐냐 그러면 물론 여러 가지 사전적인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충돌이라든지 인명 손상이나 이런 것이 발생했다는 건 다행히 아니지만 GPS 교란행위로 인해 가지고 어민들의 정상적인 어업활동이……

위원장님 1분 더 주십시오.

어업활동이 지장을 받았고 그로 인한 소득의 감소가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피해가 발생한 어선 85척 같으면 그런 어선들에 대해서 피해 상황이 어떤지를 점검해서 어떻게 좀 구제할 방법이 없는가를 연구해 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사실은 민방위법이라고 행안부 쪽에 있는 법인데 민방위 상황하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우리 국민의, 북한의 어떤 테러나 이런 걸로 피해가 발생하면 국가에서 배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는데,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이 돼 있는데 이 민방위 상황이 아닐 때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그 문제를 지적을 하고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챙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이만희 위원님 그다음에 서삼석 위원님이 주셨던 그런 의견들 잘 담아서 부처에서 준비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내가 뭐 줬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서삼석 위원** 또다시 확인해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제가 재차 그거를, 인지를 못 해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오후 질의한 지가 지금 2시간이 넘어가서 휴식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했다가 오후 4시 30분에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어기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장관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되는 업무보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2017년도에 포항의 지진을 경험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 하면 지진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촉발지진이라는 것이 있구나, 인간이 어떤 개발사업을 통해서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했고 그 피해가 너무 커서 그리고 그 뒤에 복구하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었고 이게 결국은 책임 주체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 지역에서 촉발지진으로 인한 트

라우마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동해 광구에 대한 석유 시추와 관련된 브리핑을 하셨을 때 한편으로는 석유나 가스가 나온다는 것에 대한 약간의 기대감도 있었지만 실제로 포항과 경주의 주민들은 ‘아, 이걸로 인해서 또 촉발지진이 생기는 것 아닐까’라는 우려를 현실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결국은 2017년도 지진 이후에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해저 단층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나 궁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석유 시추하기 전의 전 단계를 한번 찾아봤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자료 화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추 전에 일단 해당 지역 해저에 대한 해저 지질 안전성과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소지진, 그러니까 아주 작은 지진까지도 정밀하게 관측하고 그래서 그걸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감시망을 구축하고 그리고 만약에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것을 조기 경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런 후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한 다음에 시추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는 전적으로 해수부의 책임입니다. 12월 달에 시추를 하겠다고 정부는 발표를 했는데 과연 1번부터 4번까지 해수부가 해야 되는 이 일을 해수부는 했느냐라는 것을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윤준병 위원님 질의 중에 발표 전에는 협의 없었다, 그리고 현재 해역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위험성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사전단계에 대한 점검이 있었나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위험성이 없었다는 말씀은 제가 드린 바가 없고요.

○**임미애 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짧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것 1번부터 4번까지 진행하고 계신가요? 아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1번, 2번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보고를 못 받아 봤고요.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3번, 4번은 해수부의 일이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1번, 2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안 되고 있나 제가 봤더니 또 그렇지는 않아요. 2018년부터 21년도 사이에 정부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입법조사처를 통해서 제가 받은 자료가 있는데 동해 남부해역, 101억 원을 들여서 지진단층 조사를 했고요. 그걸 통해서 3개 해역, 영덕 외 해역, 울산 외 해역, 동해 가스전 주변 해역에 실제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지도로 만들었어요.

지도 한번 보실래요.

이 지도요. 저기 노란 게 큰 것은 리히터 규모 3~3.8인가 그렇고요, 빨간 별표는요 리히터 규모로 4~5.8 지진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실제로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석유를 시추하겠다고 하는 지역과 한번 겹쳐 보겠습니다.

저거예요, 네모난 사진. 지금 위에 있는 빗금 쳐진 부분이 시추 계획인데요. 이 안에서는 미소지진뿐만이 아니라 리히터 규모 4~5.8 규모의 지진이 발생된 지점과 지금 시추

를 하겠다고 하는 지점이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요 실제로 제가 알기에는 해양수산과학청인가 거기에 공개가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이러니 경주뿐만이 아니라 포항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시추를 하기 위해서 전 단계에서 시행했던 해수부의 업무들 하고 말씀하신 자료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시겠어요?

○**위원장 어기구** 예.

○**임미애 위원** 아까 사전단계 네 가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수부에서 지금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시추하기 전에도 빠르게 해저 지질단층 조사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해저 지질단층 조사뿐만 아니라 해역이용영향평가 해수부가 책임지고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할까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재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래서 포항과 경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촉발지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트라우마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질의에 앞서서 강신숙 수협은행장님 오셨나요?

○**수협은행장 강신숙** 예.

○**박덕흠 위원** 발언대로 잠깐 나오실래요?

나오시는 막간을 이용해서 장관님, 아까 김에 대해서, 김 가격 폭등에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화면 좀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한 언론 보도에서 나왔던 겁니다. 국내에서 김을 대량 사재기한다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내용 알고 계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알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이 업체가 국내에 들어온 지 6년이 다 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김 사재기 관련해서 현황 파악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었나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금 부처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해수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조사 계획이, 지금 조사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 기사에 대한 건입니까,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박덕흠 위원** 기업체, 사재기 관련 업체들, 혹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사재기 여부는 지금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해양수산부의 임무를 가지고…… 사재기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박덕흠 위원** 그러니까 조사 계획은 해서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건 맞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걸 한번, 현황이 되면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박덕흠 위원 그리고 김 어민들은 양식 전체 면적 10%인 6000ha의 규모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우리 해수부는 2700ha인가요, 이렇게 하겠다고 밝혔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박덕흠 위원 그 차이가 나는 건 어떤 이유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2700ha를 예측해서 가는 이유는 580만 속, 부족한 김 580만 속을 다시 보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면적입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면 그렇게 확대를 해도 김 품질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사전 조사가 된 이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품질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리고 김수매제도 있잖아요. 김수매제도 이게 아마 폐지됐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2007년에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 이유가 어떤 건가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때 가격이 굉장히 폭락했고요. 그다음에 품질이 굉장히 좀 떨어졌었습니다.

○박덕흠 위원 입장은 어떠세요, 김수매제도에 대한 입장?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현재 입장 말씀이십니까?

○박덕흠 위원 예.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필요하다면 수출하고 내수에 대한 접점을 맞추고, 그다음에 수급량 조절을 위해서는 지금 검토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래서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도 좀 파악을 해서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강신숙 수협은행장님이시지요?

○수협은행장 강신숙 예.

○박덕흠 위원 작년에 비전선포식에서 금융지주사 전환을 공표했지요?

○수협은행장 강신숙 예.

○박덕흠 위원 이에 대해서 수협은행 입장은 변화가 없으신가요?

○수협은행장 강신숙 저희 수협은행의 미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박덕흠 위원 아니, 변화가 없으시냐고요.

○수협은행장 강신숙 예,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면 지주사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신 이유 간단하게……

○수협은행장 강신숙 이유는 지금 은행산업 하나만으로는 수익성에 한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자회사 인수와 지주사 설립으로 인해서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협동조합 은행의 수익적 센터 역할을 해야 된다……

○박덕흠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지주사 전환을 위해서 지난해 웰컴캐피탈 인수에 나섰다가 무산됐지요?

○수협은행장 강신숙 예.

○박덕흠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수협은행장 강신숙 연내 인수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급변하는 금융 환경을 볼 때 건전성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면 당시에 금융기관 인수대금은 어떻게 마련할 예정이었습니까?

○수협은행장 강신숙 인수대금은 저희가 자체 자금과 중앙회 출자를 통해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박덕흠 위원 관리 감독 부처가 해수부지요?

○수협은행장 강신숙 예.

○박덕흠 위원 여기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수협은행장 강신숙 이와 관련해서 해수부에서는 은행의 자본적정성 비율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안정적으로 인수합병 추진할 것을 저희에게 권고했습니다.

○박덕흠 위원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수협은행 BIS 자기자본비율이거든요, 2023년도에 국내 시중은행 평균이 15.66%인데 거기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렇지요?

○수협은행장 강신숙 예.

○박덕흠 위원 현재 수협은행의 건전성 지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유상증자로 자금을 마련하고 금융기관 인수를 검토하는 것이 맞는가요?

○수협은행장 강신숙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요, 부탁을 하자면 수협은행이 2016년도에 공적자금을 상환해야 할 때는 최저 보통주 비율 10.5 근처에서만 저희가 했어야 됐고요……

○박덕흠 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얘기해 주세요.

○수협은행장 강신숙 그래서 공적자금 상환 이후에는 지금 내부유보금을 많이, 그전보다 2, 3배로 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신용카드 계약 해지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삭제 의무 미이행 등으로 아마 수협은행에 15억 5000만의 과태료를 부과했었지요?

○수협은행장 강신숙 예.

○박덕흠 위원 그래서 금융당국은 내부통제시스템 관리도 안 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노동진 수협중앙회장님, 수협은행 지주사 전환에 대해 중앙회 측 의견은 어떤 거예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방금 말씀처럼 필요성은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어서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검토는 여러 가지로 우리 재무 상황을 고려할 때 부채비율이나 기타 등등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조달 비용은 은행에서 배당금으로 받아 가지고 그 부담을 좀 커버할까 싶은 생각은 있는데 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덕흠 위원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협은행은 수협중앙회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박덕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협은행장 강신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 충북 증평·진천·음성 임호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관님, 제가 어제 농림부장관님한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중국 온라인 플랫폼 시스템 알리익스프레스라고 들어 보셨나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임호선 위원 테무도 들어 보셨고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임호선 위원 쿠팡을 제외하고 지금 2·3위가 알리하고 테무거든요. 이게 이용자만 836만, 823만, 국내 2·3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데인데 금년 3월에 케이베뉴(K-Venue)라고 해 가지고 우리 한국 농수산물 판매자들이 입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 수산물이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굴, 장어, 오징어, 게장 할 것 없이……

그래서 이게 3개월 만에 입점한 판매자가 3배 이상 또 일평균 주문량도 6배 이상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원산지 표시뿐만 아니라 저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는 해명 자료도 있었고 한테 정직하게 판매하는 우리 수산업자들이 혹은 어가들이, 수협이나 마트를 통해서 판매하는 분들이 이런 데 피해를 보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꼭 농수산부하고 같이해서 장관님이 관심을 가지고 전수조사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임호선 위원 그리고 조사가 되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임호선 위원 장관님, 양식수산업 종사자분들에 대한 수입보장보험 검토하실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보장보험에 대한 것은 현재 검토를 해야 되는 시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약간 농림부하고는 좀 다른 차원 같아요. 농림부에서는 양곡관리법, 농안법 대안으로 검토를 하는 건데 해수부는 그런 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생산된 물량들이 사실 재해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 대책으로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임호선 위원** 저는 수입안정보험도 필요하고 양곡관리법이나 농안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수입안정보험으로 인해서 농가가 보호된다면 충분히 병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구요.

그런데 농가와 달리 어가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손실 파악이 어렵고 피해 규모도 크고 하기 때문에 이게 2017년도 연구용역에서는 제도 시행이 어려웠던 것으로, 해양수산개발원에서 그렇게 연구용역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완해 가지고 추진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해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수입안정보험에 대한 부분은 농림부하고 조금 다른 게 저희는 합작회사를 원양에다가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자원 조사를 추진하고 있고 꽤 많은 국가들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던 오징어들이 그쪽으로 가 있다 그러면 합작회사를 만들어서 물가 안정화에 좀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깊이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래서 농림부가 대안으로 추진하려는 수입안정보험과 다르게 해수부는 조금 촘촘하게, 만약에 어민들 보호를 위해서 보험을 도입한다면 제도 설계부터 아주 꼼꼼하게 하셔서 이것도 검토되는 대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여쭙보면서, 어떤 게 좋은 방법인지 이런 것 좀 상의해 가면서 같이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충북은 바다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수면어업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 해양박물관 같은 게 바닷가에 있으면 좋겠지만, 바다에 익숙한 분들에게 해양박물관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충북도민들이나 또 성장하는 아이들한테 어떤 바다에 대한 교육적인 차원에서라도 해양박물관이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뭐를 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가 충북에는 꼭 있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장관님, 내수면어업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충북 같은 데 잘 아시다시피 내수면 예산이 지금 가두리 양식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해수부 예산 3조 1100억 중에서 66억 원에 불과하거든요. 내수면어업에 대한 투자도 물론 더 늘려야 되겠지만 우리 충북도민을 위해서 바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투자 같은 경우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수면산업 활성화 전략 만들어 가지고 초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하고 소통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법안으로 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우리 여수 같으면 지금 11개소에 4.85GW가 허가가 나 있습니다.

나 있는데, 허가 난 것은 몇 년씩 되는데 공사라든지 이런 걸 전혀 할 생각은 않고 지금 허가만 나 있는 상태거든요. 또 많은 민간사업자들이 허가를 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주민 갈등도 생기고 또 주민들과 수산인 사이에 갈등도 생기고,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기후변화의 시대에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은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방의 어촌이나 수산인들이, 어업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해상풍력밖에 없다고 말하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산자부 업무이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 해수부도 남의 일처럼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철현 위원**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우선은 지금 이해관계자 중에서 어업인들이 해상풍력 단지에서 어떠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구했고요, 앞으로 입지 선정이라든가 아니면 해상풍력 단지가 주민 수용성을 더 담을 수 있는 시설로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다각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지금 해수부에 해상풍력 주무부서가 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맡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공간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보니까 현재로서는 법적 근거가 없더라고요. 대통령령을 봐도 조력발전, 조력을 이용한 이런 것들은 있는데 해상풍력과 관련된 근거가 없는 것이 안타까운데……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저도 안타깝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 해상풍력촉진법 같은 이런 법이 빨리 제정돼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찬성합니다.

○**주철현 위원** 이 법이 제정돼야만이 우리 수산인들이라든지 지방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도 하고 또 관계자들 서로 간에 상충되는 이익을 조정하기도 하고 대화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 수도 있고.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주철현 위원** 또 해수부가 바다를…… 하여튼 간에 수산인들 권익을 보장하면서도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주철현 위원** 이 법이 지난 21대 때 3건이나 발의됐는데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제정이 안 되고 말았거든요. 22대 때도 벌써 1건이 발의됐는데 가급적 빨리 해상풍력 관련 종합적인 법률이 제정될 수 있게 장관님께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게 필요하고 간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같이 노력하시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서 있는 해상풍력에 대한 소요들이 많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것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리고 해상풍력과 관련돼서 단순히 지역주민, 근처 주민들이나 수산인들만의 해상풍력이 되면 안 되거든요. 지역주민 전체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무형의 자원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이게 추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좀 빨리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주철현 위원** 지금 수상레저하고 수중레저, 21대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상레저는 해경이, 수중레저는 해수부가 지금 관장을 하고 있는데 수상레저 사고보다는 수중레저 사고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수상레저는 3년간 198건 사고가 났는데 수중레저는 21년도 32건에서 23년도 210% 증가한 99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특히 여름철 성수기 6월부터 10월 사이에 거의 한 70%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총 10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그중 다섯 분이 목숨을 잃는, 제가 보기에 사고 대비 인명 손실률이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해수부의 역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해수부가 수중레저의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과 관련된 역할을 제가 보기에 별로 하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안전관리 규정하고 안전 점검에 대한 총괄적인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사실은 타 부처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부처의 융합적인 원팀으로서의 역할 그다음에 규정에 대한 재점검 이런 것들이 저희 해수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현재 물론 해수부가 그렇게 기본적 인허가권 가지고 기준 제정하고 기구의 점검도 하고 하지만 구체적 현장에서 수중레저 활동과 관련된, 안전지도와 관련된 점검을 하거나 또 사고가 났을 때 이걸 어떻게 조사하고 예방책 마련하고 하는 데 아무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중과 수상레저 주무부처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틀리게 잘못 나눠졌는데 이것을 그냥 해경으로 일원화시키면 어떻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해경청장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21대 때도 이 법안 개정이 와서 저희가 조정을 해서 당시의 차관께서 하여튼 기본적인 인허가권이라든지 감독권은 해수부가 가지되 안전과 관련된 권한은 수중레저도 해경이 갖는 것으로 이렇게 역할 분담해서 법을 만들어 오기로 했는데 정권이 바뀌고…… 아니, 정권이 바뀌었다기보다도 총선 지나고 어찌고 차관이 바뀌고 이러면서 그게 유야무야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의를 해서 안전과 관련되는 전문부서인 해경에서 맡아서 운영할 수 있게 그 법을 공동으로 소관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개정안을 만들어 오시면 좋겠는데 어떻겠어요? 해경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주철현 위원** 하신다고 했지요. 아니, 수상레저 안전도 하는데 수중레저 못 할 게 뭐가 있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협의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같이 해서 좀 하십시오. 그래야 맞아요. 안 그렇게 되면 녹아나는 것은, 일반 이용객들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좀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시네요.

수협중앙회장님, 수협이 24년 중점 추진 과제 중의 첫 번째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으로 정하고 어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현장 중심의 지도교육사업 전개하고 안전한 조업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네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전종덕 위원 안전한 조업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안전의식을 향상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겠지요? 그게 가장 우선해야겠지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전종덕 위원 그래서 어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인, 작업 형태에 따른 사고요인 분석 또 이에 따른 위험성을 살피고 예방안전 방안과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숙지하는 것 또한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협은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해서 현장 컨설팅 및 어업인의 현장교육 실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중점과제를 선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수협에서 엉뚱한 행동을 하셨네요. 법 제정 3년이 지나도록, 수협은 안전관리매뉴얼 제작을 올 9월에나 하셨지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전종덕 위원 그리고 교육 실시를 하셨는데 12월까지 교육한 것을 보니까 68개 조합 1900명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앞서서도 나왔지만 적용 대상인 5인 이상 50인 미만 승선이 약 5000여 척 정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안전조치매뉴얼도 교육도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전조치를 세우고 교육을 강화해서 어업인들이 숙지하고 대비를 해야 될 판에 수협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을 유예하는 결의대회에 참석을 하셨네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전종덕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해야 될 안전대책은 안 하고, 이 결의대회 사진을 보니까 밑에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하는 결의대회에 참석한 것이 이게 정말 제대로 대책을 세우는 거냐, 그것도 수협에서 여기에 참여하는 게 맞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수협 회장님, 어업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전종덕 위원 재해 예방을 위해서 안전보건에 필요한 인력, 장비 그리고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 교육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이 기본이지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맞습니다.

○전종덕 위원 예, 맞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한 조업 현장을 구축하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과 사고 요인을 줄이기 위한 그런 법입니다.

아까 수산업 특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특성을 살려야 된다 얘기를 하시는데 특성에 부합되지 않으면, 안전관리 기준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수협 자체로 먼저 그런 기준을 마련해 보고 어업인들이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쓰자고 앞장서야 되는 것이고, 특히 고령의 어업인들에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전문가를 연결해 주고 현장에서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설해 주고 이행 방법을 찾아 주는 것이, 이것을 더 노력해야지 이렇게 결의대회 열 게 아니라, 결의대회에 참석할 것이 아니라 이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시간이 되면 한 1분만 시간을 주시면,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마지막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전종덕 위원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했다고 무조건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법 7조는 사업주가 중대재해 예방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서 법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대형 선박업계에 두 건의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다 이행했다고 해서 기소도 안 됐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과 생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선 자체가 적고 고령 어업인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과 생명에 한 치도 소홀함 없도록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지금 수협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맞습니다.

○전종덕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불어서 해수부도 답변을 같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수부도 중대재해 처벌 확대 관련해서 대응체계 구축하는 것 그리고 수협에만 맡길 게 아니라 관계기관에 대해서 체계적인 대책 마련과 지원 이런 것들도 해수부가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교육과 해설사업 이런 것들도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관련해서 장관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두 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제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대재해법을 우리 어업인이 절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인력이나 어촌에서 어업 현장에 있는 어업인들에게 피해 가는 것 자체가 원치 않습니다.

단 수협은, 바다는 육지와 관계가 묘미한 게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종덕 위원 짧게 하십시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육지에는 딱 갖추어진 데에서 일어나는, 반경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의 중요성이 있는데 우리 바다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근로자 70%가 외국인이라서 한국어 인지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시간을 조금만 주면 그런 인지를 고지시키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매뉴얼을 하나하나 접목시켜서 안전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겠다는 뜻의 유예를 원하는 거지……

○전종덕 위원 이게 이미 2년 유예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 뭐 했습니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그런데 그동안 하는데도……

○전종덕 위원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지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아닙니다. 이게……

○전종덕 위원 2년 동안 시간을 줬는데 뭐 했냐고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근로자가 와서, 어업인이 와서 한 4년 있으면 또 돌아가야 됩니다. 세븐, 나인, 텐들이 4년 이따 또 돌아가야 되고 교육시키기가, 인지가 될 만하면 또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건지 지침이 없어서 좀 유예를 해 주시면 철저하게 해서 사고를 예방해서 인명사고를 방지하겠다는 뜻이지 딴 의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제대로 대책 세우십시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그리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해수부 답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크게 확대를 하지 못했던 어선안전감독관 직제를 25년에 저희가 인력을 뺏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어선어업 하시는 분들 대응 지원에 대한 예산도 좀 따서 개별 어선에 대한 교육뿐만이 아니고 각 어선별 그다음에 업종별 맞는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제대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어기구 감사합니다.

수협하고 해수부, 의견을 들어서 제도가 잘못됐으면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종덕 위원 개정이 아니라 이행이 먼저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문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금주 위원 전라남도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 문금주 위원입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님, 요즘 해상의 해경 치안수요가 어떤가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동·서·남해 상황별, 계절별 그때그때 치안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서해 같은 경우는 또 중국 측의 해양과학조사 또 시설물 설치, 여러 가지 어업 또 수산·해양 관련해서 그때그때 치안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금주 위원 방금 보니까 존경하는 주철현 위원님이 또 업무 하나 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 지역구인 고흥·보성·장흥·강진 해역은 어떤가요? 어디서 관할하나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지금 여수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에서 그쪽 해역까지 관할을 하고 파출소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문금주 위원** 고흥군에서 혹시 해양경찰서 신설 요구하지 않았나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작년에 고흥군에서……

○**문금주 위원** 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고흥뿐만 아니고 동해권 또 서·남해권 또 제주 동부권 여러 가지 치안수요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필요로 하는 곳은……

○**문금주 위원** 그러니까 고흥군에서 요구한 해양경찰서 신설, 우선순위가 있나요? 높으니까요, 어떤가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그래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어느 특정 지역에 치안수요가 많다고 하고 자료는 있지만 또 객관적인 기관에서 연구용역을 거쳐서 어느 쪽에 치안수요가, 우선순위가 많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문금주 위원** 지금 고흥군을 보니까 치안수요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데, 나로우주센터 관련도 있고 또 해수부의 국책사업을, 지금 어선건조 지원센터랄지 어선건조 진흥단지 구축 이런 부분들 또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해서 수요가 계속 늘 것으로 보니까 좀 우선순위를 높여서 추진을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감사합니다.

해수부장관님과 수협중앙회장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재해보험 한번 봐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농어업재해보험법 6조에 보면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별표 1과 같이 ‘3번.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해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질병에 대해서 보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험목적물별 보상질병 규정을 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수협중앙회로부터 관련 약관을 받아 보니까 양식수산물질병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수협중앙회에 질병에 의한 양식수산물보험금 지급 현황 자료를 요구했더니 19년 이후에는 보시다시피 자연재해 원인 수산질병 손해담보 특약 판매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1년 이후에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발생이 될까 궁금한데요. 법과 시행령, 해수부 고시까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약관에 의해서 모든 게 무력화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수산업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보상을 확대할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보상 범위를 축소시켰단 말이지요. 이해가 되시나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

○**문금주 위원** 지금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검토를 해서 재해보험에 대한 약관을 전수 검사하고 정상화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수협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알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문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 장관님, 뛰니뛰니 해도 안전이지요? 안전대책은 잘 되고 있나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안전대책 관련된 것들은 제가 현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방파제하고 테트라포드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년 한 70건 정도 발생하는데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김선교 위원 테트라포드는 표면이 둥글고 미끄럽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지지대나 손잡이가 없어서 추락하면 스스로 탈출이 어렵고 사망에 이르고, 실제 6년여간 사망자가 몇 명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금 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습니다.

○김선교 위원 65명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김선교 위원 최근에 낚시 인구가 늘면서 낚시를 즐기기 위해서 방파제를 찾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사고 우려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테트라포드가 인공어초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낚시꾼들에게는 각광받고 있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동안에 해경이나 지자체가 안전관리시설물을 설치하고 사고방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동안 미흡했어요. 그래서 등산객들도 입산통제구역 관련 단순 출입은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지만 산림자원법상 산림 내 임산물을 절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매년 수십 명이 추락하고 있는 테트라포드의 위험지역에 출입 통제 외에 단속을 강화하고 현재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수준을 보다 상향해야 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동의합니다.

○김선교 위원 동의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김선교 위원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금 출입통제 지역에 대한 추가 지정이라든가 과태료에 대한 더 확대하거나 아니면 금액을 더 증가시키는 것들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이게 법입니까, 시행령입니까, 규칙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것은 과태료 부과 기준인데 연안사고예방법, 법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선교 위원 법에? 그러면 대표발의해야겠네요? 발의해야겠어요, 법이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고려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해요.

또 어선원 산업재해 유형 중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 아시지요, 질병이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근골격계 질병이 상당히 많고요. 난청도 꽤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지금 5년간 유형별로 어선원의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2023년도 2614명을 비롯해 매년 3000명에 가까운 어선원이 여러 이유로 산업재해를 겪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질병으로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관련된 거라면 산업재해가 맞습니다.

○김선교 위원 뭐지요, 그게 산업재해에 해당되는 종류별로요. 예를 들어서 근골격이라든가 예를 들어 피부질환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근골격계하고 난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김선교 위원 난청이 많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김선교 위원 그래서 가정을 떠나서 장시간 사회와 격리된 바다에서 생활하고 일이 힘들다 보니까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에 따른 질병이 생겼을 것으로 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직업환경과 노동조건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김선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족자원 감소로 인해서 어선어업에서 양식어업으로의 전환이 세계적인 추세다, 인정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께서도 기르는 어업을 강조하셨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제 기르는 어업에 특히 육상 양식 관련해서 사실 육상 양식장이 고사 위기에 놓여 있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중 전기료 문제인데요. 전력량 요금 증감률을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농사용이 63%, 전종별 요금 평균은 41%인데 농사용이 많이 올랐고요. 그중에 자료를 보시면 양식어가 연평균 경영비 소득 실패를 한번 봐 보십시오.

양식어가 연평균 매출액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기료인 경우에 2년 사이에 52%나 올랐고요, 인건비가 30% 그렇게 해서 연평균 수익률을 따져 보면 2021년도에

7089만 원, 2022년도부터 마이너스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수익구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전기요금 부담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지난 5월 한전에서 용역을 했고 농사용 전기요금체계 개편 방안 보고받아 보셨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문대림 위원 여기 마지막 내용이 그겁니다. 300W 이상에 대해서 차등 인상한다라는 것이거든요. 300W 기준이면 기르는 양식업의 대부분이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전기료 부담이 상당한데 이제 한전의 계획조차도 인상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장관이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취임 이후에 하여튼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지금 양식어에 대한 최대 44만 원 전기료 감면에 대한……

○문대림 위원 56억 원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문대림 위원 참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소수력발전, 그러니까 배수구에서 나오는 물을 이용해서……

○문대림 위원 대책을 마련하셔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어쨌든 56억 잘한 일이라고 보고요. 다만 작년 한 해만 458억이 증가된 요금량인 데 비해서 좀 미약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등과 협의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한일 EEZ 어업협정과 관련해서 이게 왜 진도가 안 나가는 것이지요?

해수부 자료에 의하면 어업협정의 지연에 따른 피해액이 724억입니다. 안전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수협중앙회장님, 이와 관련해서 지난 2월 5일 공동건의문 제출한 적 있지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문대림 위원 그 이후에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아직 뚜렷한…… 서로 협의는 한 두 차례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렇게 보면 수협과 민간 차원에서의 노력은 있으나 정부의 해결 의지는 볼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친일 외교 강조하지 않습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좀 해 보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런 기초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취임 이후에 하여튼 외교적으로 지금 실무적으로 협상을 네 번씩 했습니다. 진전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대림 위원 그 협상 결과, 진전 협상 결과를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장관님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어업협정 이행 예산을 보게 되면 24년도 예산이 줄었다. 예산이 정책을 말을 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장님, 남중국해 연안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발견했다,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불법 범장망 그물을 발견했다, 어떻게 조치를 하시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범장망 어법이나 어구는 근본적으로 불법입니다. 주로 설치되는 라인이 남중국해 우리 허가 수역 내측 한 2해리에서 5해리 사이에 야간에 은밀하게 투하하고……

○문대림 위원 조치를 어떻게 취하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저희들이 발견하면 함정에서 자체적으로 인양해서 처분할 수 있는 그물 규격이 너무나 큼니다.

○문대림 위원 한 2km 되기 때문에……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그래서……

○문대림 위원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어업관리단에 통보를 해서 어업관리단에서 지정된 선박이 안강망선박……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어업관리단으로 통보하게 되면 그 그물을 철거할 수 있는 안강망 어선과 계약을 해서 그 계약관계에 따라 철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 시간 동안, 그 기간 동안 사실적 실효적 조치라고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그것 설치해 놓은 중국 어선이 다시 못 오게끔 저희들이 감시하고……

○문대림 위원 현재 제주, 추자도 사이에 폐그물 산이 형성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고……

어쨌든 이것을 해수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반기부터 감척 어선 2척 이용해서 범장망 그다음에 폐그물들 수거하는 것 지금 할 예정입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감척 어선 규모가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규모 있는 감척 어선을 동원해서 전담 어선 그리고 해경과 동시에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 보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지금……

○문대림 위원 어족자원 관리, 어족자원 관리 또 해양환경, 해양환경 하지만 여기에서 오는 어족자원 고갈의 문제가 심각하다, 해양환경 파괴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이런 지

적을 드리고 싶고요. 빠른 조치를 양 기관이 협력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불법어업에 대해서만큼은 해양수산부, 해군, 해경이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빠른 조치, 직접수거하는 방법을 강구 좀 해 보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석 위원** 장관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연륙도서로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하는데요. 이미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서삼석 위원** 조금 저희 입장에서 보면 해수부가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 가지고 이 문제점을 해결했으면 좋겠는데요.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25개의 연륙도서 현황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삼석 위원** 언제 끝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끝난다고 말씀하신 게 어떤 일……

○**서삼석 위원** 실태조사 파악이 언제 끝나냐고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연구용역은 21년에 실시했다고 지금 조건불리 직불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현재 매년 지자체 대상으로 행정조사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25개 연륙도서 현황을 지금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겁니다.

○**서삼석 위원** 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고, 특히 소멸위기지역의 1순위가 섬 지역이잖아요, 연륙이 됐든 안 됐든 간에. 시급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다음에 해경청장님, 산림청도 헬기 가지고 말썽이던데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카모프 헬기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재정 당국도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속도를 내서 문제점을 보완하세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꼭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요가 많으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국내 제작사와 지금 현재 계약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5대 중에 2대가 불가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아니, 그동안 부품 수입, 수리업체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는데 어디하고 협의하고 협력을 하는 거예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독점으로 계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품에 대한 단가를 부풀린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그래서 국내……

○**서삼석 위원** 여러분들 속도가 더디면 수요자들은 불시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대책 빨리 서둘러 주세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리고 1차 질의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실 해양수산 정책 소외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장관께서는 해양수산비서관 복원과 관련된 문제 또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수산위원회 설치에 대한 그런 장관의 어떤 입장, 부처의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시기를 박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다음에 전파 교란 문제 가지고 장관은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현지 어민들은 아무것도 해 준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했는데도 어민들이 안 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해수부의 조치를 서면으로 주시고 또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는데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서삼석 위원 그다음에 여객선 공영제도 마찬가지로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언제까지 1년 남지 않은 약속 기간 안에 조치를 할 것인가도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다음에 아까 참 고마우신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 육지를 지역구로 두신 위원님들이 김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김 생산량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전라남도입니다.

○서삼석 위원 그중에서 어디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역구이십니다.

○서삼석 위원 신안군이라고 얘기하세요.

장관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김은 수산물 최초로 단일품목 수출 1조 원을 돌파해서 전세계 K-푸드 열풍을 이끌고 있다라고 자랑할 정도로 김산업이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자본, 특히 입에 담기조차도 부끄러운 그 일본 자본이 국내에 입주해 가지고 김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은 너무 미흡하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니까 그 업체에 대해서는 만나 달라는 데 만나지도 않는다는 것이 이렇게 언론에 보도됐는데 낯부끄러운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언론의 내용과는 조금 틀립니다.

○서삼석 위원 물론 틀릴 수도 있겠지, 상황상 의견이 갈리니까……

그런 보도가 나왔다는 그 자체만 갖고도 저는 기분이 나빠요. 그것도 일본놈들. 다시는 이런 것들이 보도되지 않도록 특히 해수부가 각별히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다음에 해경을 생각하면 저는 항상 경찰을 생각하고 또 어민을 생각하면 농민들을 생각하는데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은 그만큼 해경이나 어민들이 경찰이나 농민들에 비해서 토양이나 환경이 너무 척박하고 열악하다는 거예요. 인정하시지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기관을 대표해서 여러분들은 배로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장관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

해수부 뭐 바뀐 건 없는데 해수부장관 의지는 좀 바뀌니까요.
이상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 간사님들 남으셨는데요, 정희용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 위원**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장관님, 아까 좀 GPS 교란 관련해서 이야기 있었습시다마는 서해5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영토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군인을 대신해서 영토를 지키고 있는 매우 소중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맞습니다. 저도 한 국민 한 분 한 분 소중하지 않은 분은 없지만 우리 서해5도의 주민분들은 특별히 우리 안보상 가지고 있는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청도, 백령도 다녀왔었는데요. 대청도에서 주민들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서 전달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청도에 2014년에 해군 부대의 선착장으로 쓰다가 백령도로 부대를 이전하고 나서 지금 비워 둔 선착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되니까 위험하고 주민분 들은 비워져 있으니까 사용하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십니다.

장관님께서 방치돼 있는 해군기지를 주민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민간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로 관리전환하는 방법을 한번 상의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해군 등과 빠르게 지금 접점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저희 추경호 원내대표님께서도 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안입니다.

제가 가 보니까 서해5도에 중국에서 쓰레기들이 밀려와 가지고 굉장히 좀 보기 안 좋 더라고요. 관광으로 수입도 많이 올리셔야 될 텐데, 주민분들께서…… 그런데 이제 육지 에 붙어 있는 해안가면 쓰레기가 밀려오면 수거해서 갖다 버리면 되는데 섬이니까 수거 해서 옮기는 비용이 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섬 지역의 중국 등 외국에서 밀려오는 쓰레 기를 처리하는 데 좀 도움을 더 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전에 가공공장에 대한 재정 투입에 대한 것도 제가 갔을 때 얘기를 했었고요. 이것도 재정당국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리고 또 주신 말씀 중에서 97년 이후에 국비 지원으로 노후어선 대체 건조 사업이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용자사업만 진행되고 있어서 영세 어민분들이 경 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 있으시겠습니까마는 노후어선 대체건조비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송명달 차관님.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예.

○정희용 위원 오늘 질문 한 번도 안 받으셨지요?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예.

○정희용 위원 22대 국회 첫 업무보고인데 제가…… 앞서 위원님들께서 내수면 산업 관련해서 말씀들 주셨습니다. 송명달 차관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내수면 양식업을 전체 어업 대비 어가수는 5.6%, 생산량은 1.2% 수준인데 생산액은 7.4%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내수면에 여러 가지 활성화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마련해 두면 내수면 낚시터라든지 그래서 해 두면 이렇게 주민들께서 레저로도 이용하실 수 있고 좀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해수부가 바다에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내수면에서도 여러 사업들을 기획을 하셔서 우리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장관님께 제가 전에 말씀드려 가지고 차관님께 한번……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해경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서해5도 가 보니까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 수가 많이 줄었다고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줄어든 추세를 계속 유지해야 될 것 같고 지난 4월에 대통령께서 서해5도특별경비단 방문하셔서 가지고 불법조업 단속 현장점검 회의 직접 주재하셨지 않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 이후로 더 줄어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불법 심리를 사전에 특별단속을 통해서 많이 제압하고 억압을 했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래서 우리도 신속하게 우리가 대응을 하니까 중국 어선들 좀 진압을 잘 하고 우리 어선들을 보호도 하고 그런 상당히 고무적인 효과를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6월까지 퇴거 실적이 596척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0% 감소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렇지만 늘 우리 어민들은 불안감 속에 있는 겁니다. 다시 또 중국 어선들이 오면 어떻게 하나, 다 끌어가 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신 만큼 우리 국민들의, 어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또 조업 질서 확립에도 앞장서 주시고 우리 해경 직원 여러분들도 신변의 안전, 안다치도록 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사기진작에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잘 알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리고 마약수사 관련해 가지고 밀반입 사례가 자꾸 늘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선박을 이용해서? 검거 건수도 같이 늘어나고 있지요, 전체적인 마약사건이

늘어나니까. 그런데 예산은 2배가 늘었는데 인력은 그대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행안부나 다른 부처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안일 것 같은데 마약은 굉장히 국민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안부 등 여러 관련 부처와 좀 협의를, 인력 증원 문제를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해경청장님 또 해수부장관님 어선 사고 관련해서 V-PASS하고 바다 내비게이션 관련한 부분인데요. 한번 두 분이 잘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V-PASS에 의한 구조 신고와 구조 인원하고요 또 바다 내비게이션을 통한 구조 신고와 구조 인원입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나와 있는데 바다 내비게이션이 0.04명입니다. 한 4배 정도가 더 높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PPT를 넘겨 주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V-PASS와 e-내비 단말기가 성능이나 또는 어민들의 활용적 측면이나 또 실제 성과적 측면을 놓고 봤을 때에 e-내비 단말기, V-PASS가 사실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경에서 운영하고 있는 V-PASS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e-내비 단말기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로 보면 e-내비 단말기가 더 효과적인 걸로 보여집니다.

해경청장님 어떤가요, 이 데이터로 보면?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단순히 데이터를 보면 그럴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이 신호를 받고 사항을 처리하고 구조하는 부분에는 다소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장관님은 어떠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단점들도 있겠지만 장점들을 융합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중복 운영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아까 업무를 조정하시던데 이 부분에 대한 기능 조정과 통합을 한번 두 분이 검토해 보시는데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무엇이 효율적인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

○이원택 위원 당연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장관님 그다음 PPT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김과 관련된 겁니다. 아까 전남이 물김 생산량이 제일 많지요, 41만t?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이원택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전북이 35만t이지요? 그다음에 충남이 31만t입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3만 1000t입니다.

○이원택 위원 아, 3만 1000t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그런데 예를 든다면 김산업 진흥지구는 전북은 하나도 없습니다. 충남은 하나 있고요. 김 가공설비 사업 지원은 보시겠지만 전북은 8개 업체인데 전남128, 충남 50개 업체입니다. 경기 20개 업체거든요. 조금은 김산업이 이제 K-푸드로서 국제사업으로 수출산업에 효자로 돼 있는데 전북에 대한 김산업 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가공설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이원택 위원 왜냐하면 물김 생산량을 놓고 보더라도 전북이 부족하지 않거든요. 전국 두 번째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장관님, 그다음에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실행계획과 관련해서 이 표를 보시면 50년까지 목표는 제출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나 25년, 30년, 35년, 40년, 45년 실행계획 단위별 목표가 제출이 안 돼 있습니다. 왜 이게 안 돼 있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게 전사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다 보니 각 사업별로 어떠한 효과들이 나오는 지에 대한 정량적이고 구체적인 목표가 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취임 이후에 기후환경 국제전략팀이라는 걸 만들고 이 전체 탄소중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그 부서에서 맡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해수부 입장은 이해하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사실 탄소중립에 적극적인지 않고 그러면서 각 부처가 사실 탄소중립 로드맵에서 좀 열악하게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국정감사 전까지 채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행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더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니요, 국내선박, 친환경선박……

IMO에서 사실 화물선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도록 지침이 있지요? 그래서 화물선은 17.7%가 전환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객선이라든가 유도선이라든가 어선은 우리 한국이 전환은 0%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좀 IMO에서 이제 선박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 화물선을 포함해서 여객선, 유도선 또 어선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이것은 사실 아까 탄소중립 실행계획과도 맞물려 있는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정채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기후위기 시대에 지구가 살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중에 하나다라는 걸 장관님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것 좀 채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녹색……

○이원택 위원 제가 장관님,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답변하세요.

내수면양식에서 제일 어려움이 뭐가 있냐면 농지에다가 내수면 양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12년이 지나면 그 농지를 복구했다가 다시 허가를 내야 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복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다시 해야 되는데. 이 제도를 좀 개선하지 않으면 내수면 양식이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식품부하고 좀 협의를 통해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원택 위원 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협의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아까 장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국무회의, 올해 2주 전으로 기억을 합니다. 국무회의에서 글로벌 녹색해운항로를 출발시킬 거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2027년 세계 최초로 녹색해운항로를 만들겠다 그것도 친환경 연료를 가지고 만들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금융과 세계의 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에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 목표로 향해서 달려갈 텐데요 많은 도움을 주십사 하는 바램을 드립니다.

○이원택 위원 저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고맙습니다.

○이원택 위원 국정감사 전까지 최대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이상으로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3차 질의를 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어서 3차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질의는 추가시간 없이 3분 드리겠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 장관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했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이양수 위원 대상이 지금 5000척이 넘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이양수 위원 일반 어선들이요.

올해 발생 현황을 보면 1월 27일 이후에 1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굉장히 애로를 호소하고 있지요. 주로 어떤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나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저희가 분석하고 현장에서 청취한 내용으로는 3, 4월에 이상 난동기후 이런 것들이 해상에서 계속 일어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 하고도 협업할 수 있는 체계들을 지금 갖추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양수 위원 지금 중대재해법 표준매뉴얼도 작성 못 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표준매뉴얼은 해수부 입장에서는 지금 작성을 하고 배포를 한 상황인데 이게 현장의 시설부터 시작해서 선박 그다음에 동선 이런 것에 전부 다 맞췄다고는 장관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양수 위원** 어선들은 지금 선원들이 5명에서 10명 정도 되면 사실 영세어업인들이 대부분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맞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이런 것들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외국인 선원들 그리고 그 선원들은 또 비자 문제 때문에 계속 교체가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영세어업인들이 이런 사고에 이런 재해가 나서 책임을 묻게 되면 그냥 배를 팔고 업을 접어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빨리 이분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도와줘야 될 것 같고 그간에는 처벌이 되도록 이유라든가 타당성 이런 것들을 잘 도와줘서 처벌되는 일들이 없도록, 처벌되면 이 사람들은 그냥 바로 사업 접어야 돼요. 그러면 바로 퇴출되는 거고 그러면 한 가정들이 다 그냥 망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실 너무 정치권에서 고민 없이 그냥 강행하는 것이, 안전 중요하지요. 안전 중요하지만 이분들 그냥, 이분들이 평상시에 안전에 대해서 소홀한 것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안전 주의 주고 합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바로 이 사람들이 그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정말 이분들이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튼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수협중앙회장님하고 장관님하고 최대한 지원을 해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그때까지 잘 좀 어민들을, 영세어민들을 돌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리고 어선의 대형화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이양수 위원** 1분 없지요?

○**위원장 어기구** 없어.

○**이양수 위원** 나머지는 다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정기국회 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위원** 청장님, 중국 해경국과 교류가 있냐요, 중국 해경국하고?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중국 해경국하고 치안기관장 협력 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정기적으로 합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이병진 위원** 핫라인은 있어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핫라인은 각 지방청별 본청 다 되어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가장 큰 톤이 몇 톤입니까, 우리 장비 중에?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저희는 5000……

○**이병진 위원** 몇 대 있어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2척의 함정이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중국은 제가 알기로는 1만 2000t이 2개 있고 5500t이 한 4척 되고.

우리가 주류가 몇 천 톤이에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주로 저희 주력은, 3000t급이 주력입니다.

○이병진 위원 몇 대 있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13척 정도 됩니다.

○이병진 위원 1500t만 해도 한 22척 되는 걸로 아는데……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이병진 위원 큰 것에서도 밀리고……

우리가 중국 어선 단속할 때 가장 필요한 게, P정이라는 것 있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소형정입니다.

○이병진 위원 P정이라고 패트롤보트, 그게 몇 척입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저희들은 82척 정도, 50t급이 82척 정도 됩니다.

○이병진 위원 50t급, 아주 가장 작은 거잖아요. 패트롤카같이 경찰의……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연안 경비함입니다.

○이병진 위원 가장 기동성이 뛰어난 거잖아요, 그렇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것과 달리 50t급이고요.

○이병진 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법상으로 20년인데 실제적으로는 닻고 조이고 해서 10년 더, 29년 30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80%가 2028년 되면 내구연한이 다 끝나는데 대책 있어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저희들이 연차사업을 통해서 오래된 것부터 해서 계속 선체 교체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20년이 초과된 함정이 벌써 9척인데, 이게 연안 해역에서 인명구조라든지 경비 단속활동의 주업무를 담당한다 말이지요. 그렇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이병진 위원 굉장히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 가장 쉽게 목도하는 그런 경비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 PPT 보면 많이 노후화되고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 특히 우리 빈틈 없는 해양주권을 강조하면서 안보 수호에 임하고 계신데 승조원 안전에도 직결된단 말이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그렇습니다.

○이병진 위원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저희들 내구연한 초과되는 함정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소요 제기를 통해서 재정당국하고 협의해서 선체 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요구하면 그대로 다 해 줘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아니지요, 다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병진 위원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우면 그냥 포기하고 됐습니다 하고 그냥 액셉트(accept) 하시는 거예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그렇지 않고 우선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함정부터 선체 교체를 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1년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가 큰 톤수에서는 중국에 대응할 수 없지만 작은 거라

도 일단 연안 방위에 있어서 가장 절실한 요체이기 때문에 대책을 최대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이만희 위원입니다.

김양수 사장님, 우리가 오랜 만에 뵙네요. 그렇지요?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해운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의 유일한 국적 선사인 HMM 매각이 지난 2월 최종적으로 불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매각 조건 가지고 따질 상황은 아니고.

계속해서 이것을 또 추진하실 거지요?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런데 매각 조건은 상당히 어려워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디 얼라이언스 관련해 가지고 가장 큰 규모였던 하파그로이드라는 회사가 얼라이언스에서 탈퇴한다는 조건도 있고요. 또 지금 미국의 어디입니까? 연방해사위원회에서 관리 대상으로 일단 선정이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어떻습니까?

매각 순조롭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 일단 얼라이언스 문제는 지금 HMM에서 부사장을 팀장으로 해서 TF를 구성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타 글로벌 선사하고 협력방안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곧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관리대상 선사 그 부분은 관리대상 선사로 지정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통상조약에 의해서 면제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HMM을 짧은 시간 내에 많이 원상회복을 시켰지 않습니까?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 예.

○이만희 위원 하여튼 앞으로 좀 더 관심 있게 관여도 하시고 일단 순조로운 매각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 예.

○이만희 위원 장관님, 해운산업의 톤세제 일몰 연장 건이 곧 다가오는데……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이것은 해운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연장이 돼야 되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해운산업 지금 현실을 지켜봤을 때 톤세제 연장은 꼭 필요한 조세라고 보여집니다.

○이만희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점검이라고 하시면 조세……

○이만희 위원 검토를 기재 당국하고, 기재부하고 관계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전체적으로 통세제 부분의 일몰 연장은 반드시 관철해야 되는 것이고 장관님은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 김양수 사장님과 협조해 가면서, 지금 해운업의 전체적인 세계적인 업황은 대규모 선사들이 이제는 해운업뿐만 아니라 기타 물류라든지 항공업처럼 사업을 다변화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해운업의 여러 가지 불안정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계획을 보면 계속 선봉량 확대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위원장 어기구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3분이니까 짧게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문대림 위원님께서 양식어가가 전기료 폭탄으로 굉장히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임미애 위원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 대위변제율이 굉장히 늘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연도별 대위변제 현황을 자료를 보시면 농업도 어렵다 하고 임업도 어렵다 했는데 저는 사실 어업의 대위변제율 늘어난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농업이 0.43% 는 것에 비하면 여기 지금 1.11% 늘었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겠어요?

왜 이렇게 대위변제율이 높아졌냐. 신보를 통한 대위변제율이 높아졌느냐라는 것을 원인 분석을 했는데요. 수산 분야의 건전성 분석에서 마지막에 빨간 줄 친 걸 보면 ‘일본의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감소’, 그러니까 실제로 아무리 이쪽에서는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것이 수산물 소비 감소로 연결이 되고 그것이 농가의 경영 위기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급하게라도 전기요금 있잖아요, 현재 도축장이나 미곡종합처리장 그다음에 천일염 시설은 전기요금 특례할인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식어가의 전기요금은 특례할인을 받고 있지 않아요.

이것에 대한 요구가 있었을 텐데 혹시 이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특례할인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다른 기관의 것……

○임미애 위원 저는, 이것 한번 적극적으로 장관님이 검토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특례할인을 받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생에너지 생산 설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양식어가가 지속적인 어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법이 어떨까라는 것을 제안드리고,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임미애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위기감이 있

고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 현실적인 방법은 방사능 측정장비 이번 내년 예산 책정하실 때 예산 대폭적으로 확대해서서 200여 개가 넘는 위판장에 모두 다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성분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까지도 성분 측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장비 좀 갖춰 주는 노력을 예산에 꼭 반영시켜 달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실제로 이양수 위원님 말씀하실 때 ‘나 같아도 이 정도의 소득을 가지면 어촌에 누가 들어오겠냐’ 그러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해수부의 조직도를 보니까 실제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귀어·귀촌을 담당할 수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러면 장관님, 이것 한번 조직점검, 조직진단 하시고요. 귀어·귀촌을 위해서 집중할 수 있는 인력 업무분장도 하시고 조직개편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KMI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제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 늦도록 고생 많으십니다.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아까 내수면 말씀드렸는데요.

장관님, 내수면 담당 인력만 2명인 것 같아요, 해수부에. 조직도 좀 갖춰 주시고 인력도 늘려 주시고 예산도 늘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이원택 간사님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7+5, 12년만 내수면 한 다음에 다시 원상 복구하는 것은 정말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사료값 인상이 소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양식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가 사료를 먹는지 사료가 고기를 먹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살펴 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립니다.

해경청장님, 앞서 존경하는 정희용 간사님께서 불법 어선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는 경찰 출신이라서 사실 관심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또 행안위에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 많이 들여다봤는데요.

최근 3년간 불법 조업 외국어선 단속 결과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22년, 23년 통계를 보면 2배로 늘었다고요, 퇴거 차단 나포 할 것 없이. 담보액도 그렇고요. 이렇게 업무가 과중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불법 어선 대응하는 해경 특수기동대 선박이 30척에 불과하고 그나마 5척은 내용연한이 초과된 노후 선박입니다.

다 알고 계시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임호선 위원 2월 14일 인천일보, ‘중국 어선 3만 3500척 출몰에 해경은 고작 6척으로 대응’ 이게 제목인데요. 더 문제인 것은 전담인력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특수진압대에서

이 어려운 업무 수행하시잖아요. 그런데 경력 5년 이하 경장, 순경이 전체의 67.3%입니다. 경험 부족한 것이지요. 사실 정말 담대하게 대응해야 되는…… 그런데 근무 여건이 대개 무척 어렵고.

특수업무수당 증액 추진 중이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런데 이게 7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늘려 가지고 될까 싶기도 하고요.

전체 예산 따져 봐야 6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 저희 여야 할 것 없이 아마 위원님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것 꼭 내년 예산에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그렇고 조금 더 과감하게 인센티브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위원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임호선 위원** 저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수당을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된다면 노력하고, 위원님 관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어기구** 임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 수산정책실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은데 좀 나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실장님께 질의하기에 앞서서 우선 거문도 간 여객선 하멜호가 신조 취항을 했습니다, 해수부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우리 여수에 수많은 여객선이 다니지만 중고 배가 아닌 신조 배가 다니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120km 거리를 1시간 40분 만에 가는 신조선이 건축돼서 주민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주민들을 대표해서 두 분께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대형 카페리선이 좀 취항했으면 좋겠다는 것, 여수에서 직접 화물을 싣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적극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고맙습니다.

실장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하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법 2개의 법이 있더라고요. 원래는 농산물과 같이 수산물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취급을 받아야 되는데 없는 것이 하도 많아서, 농산물·축산물·임산물만 규정을 하고 없는 것이 하도 많아서 찾아봤더니 별도 법이 있던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 법에도 없는 것이 있어요.

농산물과 관련돼서 차별 취급받는 게 한 가지 있던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장 김현태** 잘 모르겠습니다. 지적해 주십시오, 위원님.

○**위원장 어기구** 앞에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세요.

○**주철현 위원** 예를 들면 관측, 계약생산,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비축사업 다 있는데, 농산물안정기금이 있어요. 그런데 수산물안정기금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농산물이나 축산물이나 임산물은 이 기금을 가지고 농산물 비축, 출하조절도 하고 계약생산도 하고 과잉생산 시 생산자 보호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법 만들면서 이걸 빠뜨렸더라고요.

이것 빨리 보완해서 수산업도 농업과 똑같이 형평을 좀 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

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장 김현태**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저희 해양수산부에는 수산발전기금이라는 게 우선 있고요 지금 그걸로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완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당 차원에서 지금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를 기반으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 농산물은 다 포함돼 있는데 수산물은 빠져서 왜 빠져 있냐고 그랬더니 관련 통계나 연구용역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이렇게 차별되게 해수부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열심히 일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똑같이…… 그런데 일선에 가게 되면 어민들이 농업 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차별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장 김현태** 예.

○**주철현 위원** 열심히 해서 차별이 없도록, 느끼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장 김현태**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주철현 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제주도가 전면이 바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조금 전 질의에는 중국 어선 불법 조업에 관한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범장망 그물? 그런데 뿐만 아니라 육지부 대형어선 불법 조업이 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자료를 보시면요 각종 불법 조업들이 중국 어선에 의해서 벌어지는 게 아니고 한국 대형어선들이 조업금지구역 침해해서 불법 조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해안강망이나 근해선망.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형선망 선단이 한 번 위판한 삼치가 추자도 전체 어민 1년 어획량과 똑같은 수준에 이른다고 합니다. 단속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것은 지금 22년 상황을 하고 있는데 부처 직원들도 전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와의 어떤 부딪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대림 위원** 궁극적으로 조업금지구역 확대하는 것은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제주도에 얘기했던 12해리 말씀이신가요?

○**문대림 위원**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서는 12해리를 얘기하고 있지만……

자치경제연구원 12해리 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것까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문대림 위원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문대림 위원 그리고 범장망 불법 조업과 관련해서 단속 관련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

○문대림 위원 4억 5000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범장망 수거에 관련된 겁니까?

○문대림 위원 예, 4억 5000……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4억 5000.

○문대림 위원 그런데 이미 다 소진됐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재정당국하고 지금 내년 사업을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올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소진이 다 됐는데?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폐그물 산을 형성하고 있고요, 제때제때 수거하는 게 저는 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경하고 공조를 하되 해경에서 철거할 수 있는 장비들이 없으니까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감척 어선을……

○문대림 위원 감척 어선들을 활용해서, 감척 어선들을 공익적으로 활용할 곳이 몇 군데 있다고 보거든요. 그중의 한 군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즉각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폐그물 산이라고 하는 위치를 좀 정성적으로라도 알려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서 조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호 위원 해경청장님!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청장입니다.

○서천호 위원 최근 해양범죄 통계자료를 제가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해양범죄라고 해서 법률적으로 또는 학문상으로 정의된 개념이 있나요, 일률적으로?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통상적으로 경찰청하고 관할권 관련해서 해양에서 발생하는 범죄, 해양에서 육상으로 기인된 범죄, 육상에서 해양에 미치는 범죄 등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 장소적 구분이다라는 애기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17년부터 24년까지 형법범, 해양 특별법범 발생 건수를 보면 건수는 많이 늘었어요. 한 200% 가까이 늘었는데 실제로 검거 건수는 반대로 줄었습니다, 검거 인원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발생 대비 검거하지 못한 일부 미제 사건들……

○서천호 위원 이 부분은 분석이 덜 된 것 같아서, 하여튼 해당 파트에서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서천호 위원 그리고 마약 관련해서 전담 부서가 언제 생겼지요, 해경에?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실질적으로 작년 2023년도에…… 2022년부터 단속을 시작해서 2023년도에 마약과의 전쟁 선포 이후 지방청별로 급급하게 마약수사대가 신설되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천호 위원 마약전담반이 생기기 이전에 마약사범 단속을 보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해양에도 마약 청정지역이 아니다 하는 부분을 방증하는 것 같은데……

특히 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마약은 압수율이 28%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어떤 연구기록은 압수범죄가 100%, 150%까지도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해양에서 일어나는 마약사범도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단속을 게을림 없이 철저하게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현장에 뛰는 직원들 정말 열악한 여건…… 일하는 것만큼 보상이 될 수 있는 수당체계 개선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수사활동비도 증액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용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 위원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님,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회장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맞습니다.

○정희용 위원 특히 회장님께서 일선의 어업 현장에서 우리 어민분들을 많이 만나실 텐데 어업생산량은 줄고 어업경영도 악화되고 선원 수급도 어렵고 어선은 노후화되고 또 기후변화로 생산 어종도 변하고, 참 많은 여건이 너무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정희용 위원 그렇고.

또 여러분들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제대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계시고 그래서 막연한 불안감도 있으실 테고, 또 어선 감척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민분들이 흡족하지 못해서 저항도, 불편해하는 마음도 있으실 테고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실 텐데 오늘 22대 국회 첫 업무보고인데 수협중앙회장님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고.

외람됩니다마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오늘 해야 될 말들을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이 일목요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동해·서해·남해가 기후변화로 인하여 어종도, 생산량도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모두가 한번 다시 재정립해야 될 시점이 왔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연구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노르웨이처럼……

90년대 후반에 노르웨이가 60% 감척을 해서 생산량을 증대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종의…… 어업인이 생산하는 것을 고부가로 만들어서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일련의 일들을 이루었듯이 지금이 그 적기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위원님들이 좀 관심 가져서 진짜 힘든 이 어촌 사회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제 절박한 마음을 위원님에게 전합니다.

○정희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원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장관님, 포항 영일만 유전 개발 관련해서 아까 사실 6월 3일 날 발표 전에는 몰랐다고 말씀하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이원택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6월 3일 발표 이후에 국무회의에서 이 사안을 심의한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 사안은 심의…… 제가 참석했을 때는 현재까지 심의하지 않았습시다.

○이원택 위원 현재까지 심의하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이원택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헌법 89조에 보면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중에 4항은 ‘예산안, 결산, 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과 국가에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해야 할 사항인데 지금 6월 3일 이후로 시추를 승인했다고 한 이후로 아직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여러 가지 서류도 준비를 해야 되고……

○이원택 위원 그러니까 아직 국무회의에 상정이 안 된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원택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금이 체납된 1인 기업인 액트지오에 계약을 체결한 과정도 좀 의문이 있고 또 이게 좀 부실하고 급조된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당연히 점검도 하고 또 제대로 꾸려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대통령실에서 사실 여러 가지 법적 절차나 과정을 좀 생략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무회의 단위에서는 철저하게 따져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 세금이 정말 허투루 쓰이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래서 사실 해양수산부가 점·사용 허가를 내주는데 아까 전혀 협의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환경영향평가를 아마 환경부에서 하고 있을 텐데 장관님은 몰라도 관련 부서에서는 환경부랑 이 해역 이용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사전 논의도 일체 없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특별히 없었다고 합니다.

○이원택 위원 특별히 없었습니까?

그러면 아무튼 여기 사전검토 및 평가, 관계기관 협의, 공정회, 의견 수렴, 허가 결정 통보 이런 절차적 과정이 해수부에 남아 있을 텐데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또 정확하게 이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왜냐하면 국부가 잘못하면 정말 터무니없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성과도 내고, 또 국부가 쌓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확하게 그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래요. 저는 이 부분은 국무회의에서 심의 절차를 거쳐서 제대로 바로 잡히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3차 질의까지 다 마무리했는데요. 아마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과 각 기관 단체장님들 긴 시간 동안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여기서 생각해 보니까요, 앉아서 보니까 오늘 귀한 시간을 내서 오셨는데 한 말씀도 안 하신 기관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나라 해양수산 발전이 여기 계신 장관님과 기관장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어깨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희망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 수산이 되기 위해서 장관님과 10개 기관단체장님들이 마무리 발언 겸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관님부터 마무리 발언 겸 인사, 국민들께 꿈과 희망을 드리는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몇 가지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어촌의 현실을 보라, 그다음에 수산식품의 안전성을 잘 살피서 국민 불안함을 좀 없애라, 그다음에 해운·인력·항만 경쟁력 갖출 수 있도록 해라, 해양영토와 환경 등 잘 지킬 수 있도록 해라, 마지막으로 어업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갖출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잘 갈 수 있도록

록 해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두 다 올바른 말씀이고요. 아마 오늘 논의했던 그런 얘기들이 전부 다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무부처를 이끌어 나가는 장관으로서 국민에게 희망이 되고 경제에 정말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해양수산부가 되겠노라고 22대 업무보고에서 밝힙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어기구 장관님, 더 많이 소통하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달 차관님도 오늘 말씀이 없었지요? 차관님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장관님 모시고 깨끗한 바다 또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감사합니다.

다음, 김종욱 해양경찰청님한테도 한마디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해양에서의 치안, 바다에서 해양경찰은 때로는 소방의 역할, 때로는 앰블런스의 역할, 때로는 제4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들 험한 파도에서, 때로는 폭풍과 바람과 싸우는 우리 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관심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청장님 든든합니다.

다음은 노동진 중앙회장님 아주 그냥 걱정이 많으시지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대단히 고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제가 약속했던 진짜 어부의 세상, 진짜 어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저희들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환경공단의 한기준 이사장님.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한기준입니다.

저희는 배 한 70척을 가지고 일선에서 해양 부유 쓰레기와 침적 쓰레기, 오염 퇴적물 정화 사업 등 여러 가지 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방사능 오염수도 전국의 165개 정점에서 지난 7월부터 진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매년 직접 배로 가서 채수를 해서 매일 일선의 네이버라든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칭찬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이사장님도 현장에서 노고가 참 많으십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오운열 원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있으면 갖다 드리지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오운열** 저희 과학기술 통해서 해양수산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이춘우 이사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이사장 이춘우** 저희 수산자원공단도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반 구축을 통해서 어민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저희 임직원들 모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김양수 사장님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우리나라 해운항만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서 해양금융과 해양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 해양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해진공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 운송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감사합니다.

기관 소개를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거든요, 이름이 비슷비슷해 가지고요.

다음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이희승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이희승** 안녕하세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이희승입니다.

과학과 기술로 우리나라 해양수산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의 홍종욱 이사장님.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홍종욱**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신 어려운 어촌 현실을 똑바로 직시를 하고 앞으로 활력 있는 어촌, 돌아오는 어촌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김준석 이사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김준석** 어업인 등 해양수산 종사자께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든든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도중에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조경태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송옥주 위원님, 문금주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출석해 주신 기관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위원회 사무처 직원을 비롯한 의원실 보좌진 여러분 모두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6일 화요일 날 10시에 개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24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

○출석 위원(19인)

김선교 문금주 문대림 박덕흠 서삼석 서천호 송옥주 어기구 윤준병 이만희
이병진 이양수 이원택 임미애 임호선 전종덕 정희용 조경태 주철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전문위원 상지원

전문위원 공춘택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차관 송명달

기획조정실장 전재우

해양정책실장 김성범

수산정책실장 김현태

해운물류국장 이시원

해사안전국장 최성용

항만국장 남재현

대변인 정도현

감사관 노진학

정책기획관 류종영

해양정책관 김용태

해양환경정책관 오행록

수산정책관 홍래형

어업자원정책관 최현호

어촌양식정책관 서정호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단장 노재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원장 양영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원장 윤현수
 국립수산물과학원
 원장 최용석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장 류재형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청장 김재철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청장 강정구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장 양동엽
 해양경찰청
 청장 김종욱
 차장 오상권
 기획조정관 안성식
 경비국장 여성수
 구조안전국장 박재화
 수사국장 장인식
 정보외사국장 고민관
 해양오염방제국장 송영구
 장비기술국장 백학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노동진
 수협은행
 은행장 강신숙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한기준
 해양수산물과학기술진흥원
 원장 오운열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이춘우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김양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이희승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홍종욱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김준석